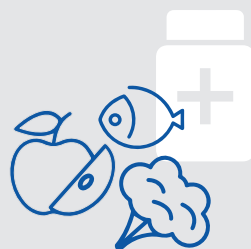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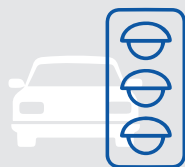


부처별 달라지는 제도

기획재정부	226	식약처	269
국세청	234	문화체육관광부	270
국토교통부	234	미래창조과학부	271
해양수산부	235	방송통신위원회	274
환경부	238	문화재청	275
기상청	241	여성가족부	276
국민안전처	243	인사혁신처	280
보건복지부	246	법무부	282
고용노동부	251	법제처	282
국방부	254	국민권익위원회	283
방위사업청	260	조달청	284
국토교통부	263	중소기업청	286
병무청	263	특허청	287
농림축산식품부	263	산림청	287



구 분	종 전	달라지는 내용	관련 법규 (제도 시행일)
			관계 부서
기획재정부			
1. 개인종합자산 관리계좌(SA) 과세특례 신설	○ 신 설	<u>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도입</u> ○ (가입대상)근로자, 사업자, 농·어민 ○ (세제지원)계좌 내 손익을 통산한 소득 200만원까지 비과세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의무가입)5년, 청년 등은 3년 ○ (납입한도)2,000만원(총 1억원)	조세 특례제한법 91의18 (‘1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 215-4232
2. 업무용 승용차 과세합리화	○ 신 설	<u>업무용승용차에 대한 비용인정 기준 마련</u> ○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시 - 운행기록을 통해 입증된 업무사용비율만큼 비용 인정 - 운행기록을 작성하지 않은 경우 승용차 관련비용은 대당 1천만원까지 인정 ※ 개인사업자는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요건 미적용 <u>업무용승용차에 대한 감가상각비 등 한도 설정</u> ○ 업무사용금액 중 감가상각비* (=감가상각비×업무사용비율)는 매년 800만원까지만 인 정, 초과금액은 이월 * 리스·렌트차량의 경우 임차료 중 감가상각비 상당액 ○ 업무용승용차 양도손실도 매년 800만원까지만 비용인정, 초과금액은 이월 <u>업무용승용차에 대해 감가상각 의무화(‘16년 이후 취득분부 터) 개인사업자의 업무용 승용차 매각손익 과세</u>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보도자료〉 2015년도 세법개정안 (12개) 분회의 통과 보도자료	법인세법, 소득세법법인 · 성실신고확인 대상자 (‘16년 1월 1일)
			복식부기 작성대상 개인사업자 (‘17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 215-4221
			소득세제과 044) 215-4211
3. 청년고용 증대세제	○ 신 설	<u>직전 과세연도보다 청년 정규직 근로자 수가 증가한 기업 에 대하여 증가한 인원 1인당 500만원(대기업 200만원)씩 을 세액공제</u>	조세특례 제도법 (‘15년 12월 31일)
			기획재정부 조세특례제도과 044) 215-4131

4. 해외주식투자 전용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 신 설	해외 주식형 펀드 비과세특례 신설 ○ 요건 - (대상) 해외상장주식에 60%이상 투자하는 펀드 - (가입기간) ’16. 1. 1~’17. 12. 31 - (가입방법) 투자 전용계좌를 통해 매수 ○ 납입한도: 1인당 3천만원 ○ 세제지원: 해외주식의 매매·평가차익과 이에 따른 환차익 에 대한 배당소득 비과세	조세특례 제한법 91의17 (’1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금융세제과 044) 215-4233
5.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신설	○ 신 설	이월결손금 연간 공제한도 ○ 일반기업 : 당해연도 소득의 80% ○ 중소기업 : 현행유지	법인세법 (’1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 044) 215-4221
6. 비사업용 토지 양도시 중과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 하용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 ○ 개인·중소법인에 대하여 10%p 추가과세 유예 (’15. 12. 31일까지) ○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	비사업용 토지 중과제도의 정상적 운용 ○ 개인·중소법인에 대하여 10%p 추가과세 적용 ○ 장기보유특별공제(개인, 10년이상 보유시 최대 30%) 적용 - 다만, ’15.12.31일까지 취득한 토지의 경우 ’16.1.1일 부터 보유기간을 기산하여 공제액 계산	(’1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 215-4311
7. 상속재산에 대한 인적공제 확대	인적공제 ○ (자녀) 3천만원 ○ (미성년자) 20세까지 연간 5백만원 ○ (연로자) 3천만원, 60세 이상 ○ (장애인) 기대여명 기준 연간 5백만원	인적공제 공제액 확대 및 기준연령 조정 ○ (자녀) 5천만원 ○ (미성년자) 19세까지 연간 1천만원 ○ (연로자) 5천만원, 65세 이상 ○ (장애인) 기대여명 기준 연간 1천만원	상속세및 증여세법 (’1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 215-4312

8. 동거주택 상속공제 공제율 상향 조정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액 [①, ② 중 작은 금액] ① 5억원 ②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40 동거주택 판정기간 ○ 피상속인과 무주택자인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동거	상속공제 금액 확대 (좌 동) ○ (좌 동) ○ 상속주택가액의 100분의 80	상속세및 증여세법 (16년 1월 1일)
		동거주택 판정기간 ○ (좌 동) ○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 제외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 도자료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 215- 4312
9. 증여재산에 대한 공제액 상향 조정	증여공제액(10년 합산) ○ (배우자간) 6억원 ○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자 2천만원) ○ (직계비속→직계존속) 3천만원 ○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5백만원	증여공제액 확대 ○ (좌 동) ○ (좌 동) ○ (직계비속→직계존속) 5천만원 (6촌 이내 혈족·4촌 이내 인척간) 1천만원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상속세및 증여세법 (1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 044) 215- 4312
10.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 대한 즉시환급 실시	○ 신 설	면세판매자는 아래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 면세판매장에서 외국인관광객에게 면세물품을 즉시환급할 수 있다. ○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를 포함한 1회 거래가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 ○ 외국인관광객이 입국 후 즉시환급을 받은 거래들의 총 거래가액이 100만원 이하인 경우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조세 특례제한법 (1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 세제과 044) 215- 4324
11.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	○ 신 설	외국인관광객 의료용역 부가 가치세 환급 특례 ○ (대상) 미용성형 의료용역 ○ (적용기한) '16. 4. 1~'17. 3. 31 부가가치세 환급절차 등 ○ 의료기관은 외국인관광객에게 의료용역 공급확인서 발급 ○ 외국인관광객은 환급창구운영사업자에게 의료용역 공급 확인서를 제출하고 부가가치세 환급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제개편 보도자료	조세 특례제한법 (16년 4월 1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 세제과 044) 215- 4324
12.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신 설	온실가스 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배출권 ○ 동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 동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상쇄배출권	조세 특례제한법 (1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부가가치 세제과 044) 215- 4323

13. 역외 탈세 방지 강화 등	① 다국적기 업의 국제 거래정보 제출의무 추가	신 설 ※ 국제거래에 대한 자료제 출 의무 ○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 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 세의무자 ○ 제출서류: 국제거래명세서 ○ 제출시한: 소득세 및 법인 세 신고기한 ○ 미제출시: 1천만원 과태 료 부과	다국적 기업에 국제거래에 대한 정보 제출 의무 추가 ○ 적용대상: 일정 거래 및 자산규모 이상의 내국법인 및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 ○ 제출서류: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 다국적 기업의 경영정보 및 이전가격 관련 거래 현황 ○ 제출시한: 법인세 신고기한 ○ 미제출시: 1천만원 과태료 부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 도자료	국제조세 조정법 (16년 1월 1일)
	② 연결법인 의 해외자 회사 관련 자료제출 기한 연장	내국법인의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 제출 의무 ○ (제출자료) - (특정외국법인 관련) 재무 제표, 법인세 신고서, 유보 소득 계산 명세서 등 - (해외현지법인 관련) 해외 현지법인 명세서 · 재무상 황표 · 손실거래 명세서 등 ○ (제출기한) 법인세 신고 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 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추 가>	연결모법인의 해외자회사 관련 자료제출 기한 연장 ○ (좌 동) - ‘연결법인의 신고기한’ *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4개월 이내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 도자료	국제조세 조정법, 법인세법 (16년 1월 1일)
	③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을 위한 금융회사 의 정보 식별·보유 권한 신설	○ 신 설	정기적 금융정보 교환 관련 금융회사의 정보 식별 근거 및 방법 ○ 금융회사는 금융정보의 원활한 제출을 위해 필요한 경우 모든 비거주자 등의 인적 사항을 확인 ○ 금융회사는 식별한 계좌가 보고대상 계좌로 분류 (국세청에 보고의무 발생)되기 전까지 당해 계좌 정보를 보유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 도자료	국제조세 조정법 (1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제도와 044) 215- 4424

13. 역외 탈세 방지 강화 등	④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등 위반 처벌 대상 확대	교환대상 금융정보의 보안의무 등을 위반한 개인에 대해 처벌 ○ 신 설	처벌대상 확대 ○ 보안 위반 행위자를 관리·감독하는 금융회사도 처벌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 도자료	국제조세 조정법 (’16년 1월 1일)
	⑤ 재외국민의 해외금융 계좌 신고 기준 강화	해외금융계좌 신고제도 ○ 대상: 해외금융회사에 개 설한 금융계좌 (현금, 주 식 등) ○ 기준: 해당 연도의 매월 말 일 중 어느 하루의 보유계 좌잔액이 10억원 초과 ○ 신고의무자: 거주자, 내 국법인 ○ 신고제외자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로 부터 과거 2년 중 거소 기간이 1년 이하인 재외 국민 - 신고대상연도 종료일 로부터 과거 10년중 주 소·거소 기간이 5년 이 하인 외국인 거주자 등	재외국민의 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 강화 좌동 - 1년 → 183일 - (좌 동)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 도자료	국제조세 조정법 (’16년 1월 1일)
	⑥ 비거주자 등의 부동산 과다보유 법인 주식 판정기준 보완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주식양 도시 부동산 양도로 보아 과 세되는 부동산 과다보유법인 의 주식 판정기준 ○ 해당 법인의 자산총액 중 부동산 비율이 50% 이상 인 주식	부동산 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판정기준 보완 ○(좌 동) - 부동산 비율 계산시 해당 법인이 소유한 다른 부동산 과 다보유 법인의 주식가액(부동산보유비율 상당액)도 합산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도자료	소득세법, 법인세법 (’16년 1월 1일)
<div>판정기준(현행)</div> <div><div>해당 법인의 부동산가액</div><div>≥ 50%</div><div>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div></div> <div>판정기준(개정)</div> <div><div>해당 법인의 부동산가액</div><div>+</div><div><div>해당 법인이 보유한 다른 법인의 주식가액</div><div>X</div><div>다른 법인의 부동산 가액 다른 법인의 총자산</div></div><div>≥ 50%</div><div>해당 법인의 총자산가액</div></div>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와 044) 215- 4422			

13. 역외 탈세 방지 강화 등	⑦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 예금 비과세 적용 종료	비거주자 등의 정기외화예금 의 이자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면제대상: 비거주자, 외국 법인 ○ 면제요건: 금융감독원 약 관승인을 받은 계약기간 1 년이상인 정기외화예금 ○ 감면추징: 계약해지나 중 도 인출시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15.12.31.까지 가입분	적용 종료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 도자료	조세 특례제한법 (’16년 1월 1일)
	⑧ 해외자원 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적용 종료	해외자원개발투자 배당소득 과세면제 ○ 해외자원개발사업 배당소 득 중 자원 보유국에서 조 세를 면제받은 부분에 한하 여 법인세 면제 ○ 적용기한: '15.12.31.	적용 종료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 도자료	조세 특례제한법 (’16년 1월 1일)
	⑨ 외국인투 자 조세감 면한도 산정 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한도: ①+② ① 금액기준 - 7년형 감면 : 외국인투자 금액×70% - 5년형 감면 : 외국인투자 금액×50% ② 고용기준 - 외국인투자금 액의 20% 한도로 다음 금 액을 합한 금액 (i) 마이스터고·특성화고 졸 업생 등 : 1인당 2천만원 (ii) 청년근로자·장애인·60 세 이상 : 1인당 1천5백만 원 (iii) 기타: 1인당 1천만원	감면한도 산정시 고용부분 비중 확대 ① 금액기준 - 7년형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50% - 5년형 감면 : 외국인투자금액×40% ② 고용기준 - 7년형 감면 외국인투자금액의 40%, 5년형 감면 외국인 투자금액의 30%한도로 다음 금액을 합한 금액 좌동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 도자료	조세특례 제한법 (’1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와 044) 215-4423

13. 역외 탈세 방지 강화 등	⑩ 외국인 투자기업 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방지 강화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내국인 등의 우회투자 감면배제 대상 ○ 내국인이 직·간접 10% 이상 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시 내국인 지분상당 투자액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 투자기업 지분을 10% 이 상 소유한 내국인 주주가 외국인투자가에게 대여한 금액	우회투자 감면배제 강화 ○ 내국인이 직·간접 5% 이상 지분을 소유하거나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외국법인이 외국인투자시 내국 인 지분상당 투자액 ○ 외국인투자기업 지분을 5% 이상 소유하거나 외투기업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내국인이 외국인투자자에 게 대여한 금액 * 대한민국국민 등이 임원의 임면(任免) 등의 방법으로 중요한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의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 도자료	조세특례 제한법 (1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44) 215-4423
	⑪ 외국인 투자 이행지연 방지제도 개선	외국인투자 이행지연 방지 ○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3년 이내 최초출자가 없는 경우: 감면결정 효력 상실 <추 가>	투자 이행지연 방지 강화 ○ 출자는 하였으나 조세감면결정 통지일로부터 5년 이내 사업개시를 안하는 경우: 5년이 되는 날부터 사업개시를 한 것으로 간주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 도자료	조세특례 제한법 (1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국제 조세제도과 044) 215-4423
	⑫ 평창동계 올림픽 관련 비거주자· 외국법인 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신 설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식기관 및 Top스폰서 외국법인*의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법인세 면제 * 국내고정사업장이 없는 경우를 말함. 단, 기록측정 등 관련업체 가 일시적으로 설치한 국내고정사업장 발생소득은 법인세 면제 평창동계올림픽대회 참가·운영과 관련된 활동을 수행하는 비거주자*가 대회운영과 관련하여 수취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 평창올림픽조직위의 대회 참가인증을 받은 자에 한함 적용기한: '18.12.31.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5년 세법개정 보 도자료	조세특례 제한법 (16년 1월 1일)	기획재정부 국제조세 제도과 044) 215-4423
14. 세무사의 불필요한 규제 해소	개업, 폐업, 휴업시 기획재정부에 신고	○ (폐 지)		세무사법 (16년 1월 1일)	
	장부 작성비치			기획재정부 조세특례 제도과 044) 215-4134	

15. 여행자 휴대품 등의 간이세율 인하	품목별 간이세율 ○ 고급사진기 : 50% ○ 녹음 : 41% ○ 향수 : 27% ○ 가전제품 : 25%	품목별 간이세율 ○ 고급사진기 : 20% ○ 녹음 : 32% ○ 향수 : 20% ○ 가전제품 : 20%	관세법 시행령 (16년 1월 1일)
	합산세율(20%) 적용 대상 ○ 녹음, 향수는 제외 (각 41%, 27% 적용)	합산세율(20%) 적용 대상 ○ 녹음, 향수도 포함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2010년 세제개편 보 도자료	기획재정부 산업관세과 044) 215- 4434
16. FTA특례법 전면개정	법령 체계 ○ 36개 조문	법령 체계 정비 ○ 46개 조문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16년 7월 1일)
	FTA 일반원칙 미규정	FTA 일반원칙 ○ 협정관세 적용요건 ○ 원산지 증명원칙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미비 ○ 조사대상자의 협정관세 적용보류 ○ 원산지조사시 납용권 금지조항 없음	납세편의 제고 및 납세자 권리보호 ○ 원산지조사시 조사권 남용금지 ○ 중소기업 등에 대한 원산지 증명 절차 등 상담 및 교육 지원 ○ 협정관세 적용물품의 가산세 징수·감면 등 근거 마련 ○ 납세담보 제공시 협정관세 적용	
하위법령 규정(시행령) ○ 원산지인증수출자 ○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 관세청 지도·감독 근거	하위법령 규정 법률근거 명확화 ○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 및 해제 근거 신설 ○ 원산지증빙서류를 허위작성한 자를 협정관세 적용제한자 로 지정하는 근거 명확화 ○ 관세청의 원산지증명서 발급기관에 대한 지도·감독 및 자 료제출 요구 근거 마련 (참고) 기획재정부 홈페이지 > 법령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 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기획재정부 FTA관세이행과 044) 215- 4471	

국세청			
1. 근로장려금 수급대상 확대	○ 단독가구 신청자격 60세 이상	○ 단독가구 신청자격 50세 이상으로 완화 (참고) 국세청홈페이지 > 세목별 정보 > 근로·자녀장려금 > 신청자격 >	조세특례제한법 제100조의3 ('16년 1월) 국세청 소득지원과 044) 204-3812, 3817
2. 모바일 상담 확대	○ 홈택스 분야만 모바일 상담 실시	○ 세법분야까지 확대 실시	국세청고객만족센터 사무처리규정 ('16년 1월) 국세청 고객만족센터 064) 780-6008

국토교통부				
1. 지역개발 사업 관리업무	○ 국토부(지역정책과) 에서 지역개발사업 관리 등 업무 총괄		○ 지역개발사업의 예산교부, 집행점검, 경미한 사업변 경 등 관리업무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임 (참고) 국토교통부홈페이지 > 국토교통뉴스 > 보도자료 > 지역개발사업 관리, 지방국토청에 위임	보조금관리법 지역개발지원법 ('16년 1월) 국토교통부 지역정책과 044) 201- 3667
2. 공장 설립, 건축 행위 등 토지 이용 인허가 빨라 진다	① 일괄협의 제도도입	○ 관계기관 협의기간 약 3~4개월 소요	○ 관계기관 협의를 모두 동시진행 → 최소 60일 인허가 기간	토지인허가 간소화법 ('16년 1월 21일)
	② 개별 위원회 통합심의	○ 개별 위원회를 각각 거침	○ 위원회의 통합운영 추진 → 최소 60일 이상 단축	
	③ 인허가 협의 기간 명시	○ 인허가 협의기간 장기화	○ 협의기간 및 서류 보완회수 명시 → 인허가 장기화 요인 제거	
	④ 사전심의 제도 도입	○ 모든 인허가 조건 충족 후 인허가 신청	○ 요건 미충족 사전심의제도 도입 → 불필요한 투자비용 손실 예방	
	⑤ 이견 조정 기능 강화	○ 민원인이 직접 조정하여 조정 장기화	○ 행정기관 주도의 조정 추진 → 조정의 실효성 제고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044) 201- 3707
	⑥ 허가전담 부서 설치	○ 인허가 전담조직 부재	○ 허가전담부서 설치 → 수요자 중심의 컨설팅 서비스 등 제공	
	⑦ 통합인허가 지원 시스템 구축	○ 시스템 미비	○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 대국민 인허가 서비스 제공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건축·개발행위·공장설립 허가 기간 대폭 단축 된다	

3. 소음대책지역 전기료 지원대상 확대	○ 학교 및 기초생활수 급권자	○ 학교 및 일반 주민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소음 대책 중기계획 수립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6년 6월)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 201- 4342
4. 손실보상 및 토지매수 청구지역 확대	○ 제1종구역	○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구역(제3종 가 구역) (참고)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소음 대책 중기계획 수립	공항소음 방지 및 소음대책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16년 6월) 국토교통부 공항안전환경과 044) 201- 4342

해양수산부			
1. 수산장비 구입지원을 위한 융자금대출 실시	-	○ 고가의 수산장비를 구입할 경우 장비 구입액의 80%까지 융자금 지원	수산업어촌 발전기본법 ('16년 3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200-5461
2.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개시	○ 신 설	○ 태풍, 적조, 수산질병, 유류오염 등으로 인해 어업인 경영위기 발생시 해양수산부장관의 결정에 따라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소식바다 > 새소식 > 공지사항 > 수산발전기금 사업시행지침	수산발전기금 사업지침 ('16년 1월 1일) 해양수산부 수산정책과 044) 200-5431
3. 급유선 없어도 유조차량에 대해 '선박급유업' 등록 허용	○ 유조차량만으로 급유 업 등록 불가	○ 유조차량만으로도 급유업으로 등록시켜 소규모 항만 에서나 소형선박 등에 대해 급유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적기에 안정적인 급유 가능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16년 상)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 200-5773
4. 조건불리지역 수산직불제 대상 확대	○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 (제주본섬 제외)	○ 육지로부터 8km이상 떨어진 도서 (제주본도의 읍,면지역 포함)	수산직접지불제 시행에 관한 법률 ('16년 1월 1일)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 200-5465
5. 양식수산물재해보험 대상품목 및 보장범위 확대	○ 21개 품목	○ 24개 품목 (+3개) ○ 보장범위 - 미역·다시마 보장재해 추가 : 조수(潮水) - 전복 보험목적물 확대 : (기존) 해상 → (확대) 해상·육상 양식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농어업재해 보험법 및 시행령 ('16년 3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 200-5471

6. 어선원보험 당연 (의무)가입대상 확대	○ 5톤이상 어선	○ 4톤이상 어선으로 확대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어선원 및 어선 재해 보상보험법 시행령 (’16년 1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 200-5471
7. 어업인의 안전재해에 대비한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 민간보험 (보조사업)	○ 어업인안전보험 출시 (국가 정책보험) (보험료 50%이상 국고지원)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농어업인의 안전보험 및 안전재해 예방에 관한 법률 (’16년 1월)
			해양수산부 소득복지과 044) 200-5471
8. 혼획(混獲)이 허용되는 어업, 혼획저감장치 부착 조업	○ 혼획저감장치 기준 부재 (과도한 혼획 발생으 로 어획물 선별에 따 른 어업인 불편 발생)	○ 여러 종류의 혼획저감장치 중 선택적으로 어구에 부착하여 조업함으로써 효율적 조업 및 자원관리 가능	혼획관리고시 (’16년 6월 1일)
			해양수산부 어업정책과 044) 200-5516
9. 비관리청 항만공사 시행허가 절차 간소화	○ 고정식 또는 이동식 하역장비의 신설·개 축시 비관리청 항만공 사 시행허가와 함께 장비 설치 신고를 별 도로 하여야 함	○ 하역장비 등을 설치 신고하는 경우 항만공사시행허가 및 실시계획 신고 절차를 생략	항만법 (’16년 6월 예정)
			해양수산부 항만정책과 044) 200-5921
10. 1종 항만배후단지 민간개발·분양 허용	○ 공공개발·임대만 가능	○ 민간개발·분양도 가능(병행추진)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배후단지 개발계획 변경 (’15년 12월)
			해양수산부항만투자 협력과 044) 200-5962
11. 국가 시행 연안정비사업 대상 기준 상향 조정	○ 총공사비 100억원 이상	○ 총공사비 200억원 이상 (참고) 연안관리법 시행령 개정안 공포(2015. 3. 3)	연안관리법 시행령 (’16년 1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 044) 200-5263
12. 해수욕장 안전강화 등 이용환경 개선 (예정)	○ 개정시간 중 지정된 흡연구역 외 흡연 금 지 및 차마출입 금지	○ 금연구역, 차마출입 구역 등 관련사항을 조례로 지정 하게 하여 각 해수욕장 특성에 맞는 정책 시행 가능 ○ 정비보수 명령 미이행시설의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공포 6개월 후 시행)
			해양수산부 해양레저과 044) 200-5252

13.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 ‘15. 12. 31까지는 폐수 및 폐수오니 배출허용	○ 폐수 및 폐수오니 등 육상폐기물 해양배출 전면금지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보도자료 > 폐기물배출해역 정밀조사	해양환경관리법 제23조 (’13년 3월)
			해양수산부 해양보전과 044) 200-5303
14. 5개 물류기업 인증제 「물류정책기본법」으로 일원화	○ 5개 분야 및 개별법 령별 시행	○ 물류정책기본법으로 통합 (참고) 해양수산부 홈페이지 > 법령바다 > 공고 > 우수물류 기업 인증에 관한 규칙	우수물류기업 인증에 관한 규칙 (’15년 12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 200- 5726
15. 외항여객선 유류할증제 개선	○ 외항여객선 유류할증료 부과체계 관리 미비	○ 외항여객선사별 유류할증료 부과기준표 신고·부과 및 변동사항 선사 홈페이지에 고지	해운법 제11조 (’16년 1월)
			해양수산부 해운정책과 044) 200- 5718
16. 천일염 생산시설 전기요금 20% 인하	○ 전기공급약관상 산업용 전기요금 적용하도록 정하여 연간 약 13억원 소요	○ 전기공급약관 시행세칙 개정하여 일반 산업용 전기요금보다 20% 인하한 요금 적용 (연간 약 3억원 절감)	한전 전기공급약관 및 시행세칙 (’16년 1월)
			해양수산부 유통정책과 044) 200-5449
17. 국가와 항만공사가 운영하는 시설에서도 항만시설 보안료 징수	○ 민간 운영시설 일부만 보안료 징수 가능	○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대상을 국가와 항만공사 등이 운영하는 공공시설로 확대하고, 민간의 보안료 징수요건 완화와 징수방법 개선으로 보안료 징수 실효성 제고	항만시설보안료 징수 관련 고시 (’16년 상)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 200- 5777
18. 부두운영회사(TOC) 부두임대료 체계 개편	○ 다양한 변수를 활용한 복잡한 선석임대료 ○ 기존-신설 TOC간 임대료 단가 상이	○ 기존 선석임대료를 안벽의 재산가치를 반영한 안벽 임대료로 개편 ○ 창고·야적장·통로 임대료는 TOC 운영개시 시점에 관계없이 2003년 이후 누적 생산자물가상승률 적용	’16년 상반기
			해양수산부 항만운영과 044) 200- 5775
19. 해양원격의료 서비스 확대	○ 원양선박 6척	○ 원양선박 20척 (참고) 해양수산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해양원격의료서비스 추진계획 (’16년 3월)
			해양수산부 선원정책과 044) 200-5745

환경부			
1. 나프탈렌 등 5개 물질 배출허용기준 신규적용	○ 5개 물질의 배출허용기준을 ‘16.1.1까지 적용유예함	○ 폐수배출시설 사업장은 공공수역으로 폐수 방류시 5개 수질오염물질에 대하여 배출허용기준 준수의무를 부담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시행 규칙 (‘16년 1월 1일)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 201- 7061
2. 생태독성 배출허용기준 강화	○ 기준 완화 적용	○ 청정지역에 설치된 3~5종 사업장 및 유예 받은 5개 업종에 대하여 기준 강화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년 1월 1일)
			환경부 수질관리과 044) 201-7071
3. 지자체 간 인접지역을 가축사육 제한구역으로 지정요청	○ 시장·군수·구청장이 관할 구역 내를 가축사육 제한 구역 지정	○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접 시·군·구 지역을 가축사육제한구역으로 지정하도록 요청	가축분뇨법 (공포 후 6개월 경과일)
			환경부 유역총량과 044) 201 -7025
4.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에 관한 규정	○ 미설정	○ 생물자원의 기증·기탁·이관 및 교환에 관한 규정 (제정·신설)	야생생물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5년 9월 25일)
			환경부 국립멸종 위기종복원센터 건립추진단 044) 201 -7266
5. 환경영향이 경미한 사업의 소규모 환경영향 평가 협의기간 단축	○ 협의기간 30일	○ 환경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개발사업에 대해서는 20일 이내에 협의 내용 통보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16년 1월 1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 201-7277

6. 사전적격심사 제도(PQ) 시행	-	○ 환경영향평가업자에 대한 사전적격심사제도 (PQ) 신설	환경영향평가법 (‘16년 1월 21일)
			환경부 국토환경정책과 044) 201-7277
7.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 미 실시	○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 성과평가 실시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 억제 계획의 수립주기 및 평가 방법 등에 관한 지침 (‘15년 9월 3일)
			환경부 폐자원관리과 044) 201- 7361
8. 대기오염물질 비산배출시설 신고 대상업종 확대	○ ‘15년 신고대상 : 6개 업종	○ ‘16년 신고대상 : 20개 업종(14개 업종 추가) * 대상업종 세부현황 : 참고 2	대기환경보전법 시행령·시행규칙 (‘16년 1월 1일)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 201- 6909
9. 도로재비산먼지 이동측정차량 운영	-	○ 대기오염도의 측정결과 공개 등	수도권대기환경 개선에 관한특별법 (‘16년 1월 1일)
			환경부 대기관리과 044) 201- 6902
10. 물 재이용 용도, 수질기준 현실화	○ 도시재이용수	○ 도시재이용수 세분화 - 세척·살수용수, 청소·화장실 용수(수질기준 강화)로 세분화	물의 재이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16년 3월 5일)
			환경부 생활하수와 044) 201- 7141
	○ 공업용수 수질기준으로 이용 목적, 수요자 요구와 상관없는 기준	○ 공업용수 수질기준 삭제 - 수요처와 공급처간의 협의에 의해 수요처 요구에 맞도록 개선	

11. 환경 오염 피해 구제 제도 시행	① 환경 오염 피해 자의 입증 부담 완화		○ 무과실책임, 인과관계추정 및 정보청구권 제도 도입	환경오염 피해구제법 (‘16년 1월 1일)
	② 환경 책임 보험 도입		○ 환경시설의 환경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③ 환경 오염 피해 구제 급여 도입		○ 국가가 피해구제의 사각지대를 해소	환경부 정책총괄과 044) 201-6650
12.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 신설	○ 사업비 환수금 미납 시 독촉할 수 있는 근거 부재	○ '사업비 환수금의 독촉' 조항을 신설하여, 환수금 미납 시 납부를 독촉하고 기한이 경과한 때에는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는 근거 마련	환경기술개발사업 운영규정 (‘16년 중)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044) 201- 6668	
13. 파생모델별 환경표지 인증을 제품별 인증으로 전환	○ 파생제품 모델별로 환경 표지 인증 신청	○ 기본제품에 대해서만 인증을 받으면 그에 딸린 파생제품도 인증을 부여받음	환경표지 대상제품 및 인증기준 (‘16년 2월 1일)	
			환경부 환경기술경제과 044) 201- 6669	
14. 환경안전 관리기준 의무대상 확대	○ '09. 3. 22 이후 설치된 어린이활동 공간은 설치 시부터 기준 준수 의무화	○ '09. 3. 22일 이전에 설치된 어린이활동공간은 '16. 1. 1일부터 환경안전관리기준 준수 의무화 (430㎡ 미만 사설 어린이집, 유치원은 '18. 1. 1일부터)	환경보건법 제23조 (‘16년 1월 1일)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과 044) 201- 6757	

기상청			
1. 기상정보 선진화, 슈퍼컴퓨터 4호 기와 함께 (중요)	○ 슈퍼컴퓨터 3호기 운영	○ 슈퍼컴퓨터 4호기(누리, 미리)운영 ○ 기상청 슈퍼컴퓨팅 성능 향상 - 3호기(758TF) → 4호기(5,800TF)운영 ○ 수치모델 성능 향상 - 전지구 수치예보모델 해상도 증가 (25km → 17km) - 국지양상블 예측모델 운영(3km해상도) (참고) 기상청홈페이지 > 행정과정책 > 보도자료 > 기상용 슈퍼컴 퓨터(4호기) 낙찰예정사 선정	- (‘16년 3월)
			기상청 국가기상슈퍼컴퓨터 센터 043) 711-0230
2. 기상기후 빅데이터 분석 플랫폼 민간 전면개방	○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대학 등 공공분야 개방	○ 개인, 기업 등 민간분야 전면 개방 - 웹포털에 접속하여 회원 가입을 통해 누구나 이용 가능 (참고) 기상청홈페이지 > 날씨 > 태풍	- (‘16년 6월)
			기상청 기상기술 융합팀 02) 2181-0906
3. 클라우드 방재기상정보서 비스 확대	○ 인터넷망 접속 ○ 위험기상감시, 통합기상 분석 콘텐츠 이용	○ 업무망(행정망)에서 접속 가능 ○ 그래픽캐스트, 뇌우감시추적, 3차원 기상표출 시스템 활용 가능 (참고) 웹페이지 afso.kma.go.kr	- (‘16년 2월)
			기상청 예보국 예보기술분석과 02) 2181-0654
4. 3차원 기상분석 날씨 해설영상 (VOD) 제작 및 홈페이지 서비스 운영	○ 단순 날씨정보 전달 ○ 캐스터 해설	○ 3차원 기상표출시스템을 활용하여 과학적·입체적 분석 ○ 전문 기상예보관 해설	- (‘16년 2월)
			기상청 예보국 위험기상대응팀 02) 2181-0657

5. GIS기반의 태풍 정보 동적 제공	○ 태풍통보문	○ 지리정보(GIS)기반으로 태풍 상세정보를 동적으로 제공	- (’16년 5월)
		(참고) 기상청홈페이지 > 날씨 > 태풍	기상청 예보국 국가태풍센터 070) 7850-6371
6. 북극해빙정보 확대 서비스 개시	○ 북극 전역의 해빙정보 제공 ○ 웹기반의 서비스	○ 북극항로의 해빙정보 추가 제공 ○ 북극해빙 3개월 전망 정보 제공 ○ 웹 및 모바일 기반의 서비스 제공 http://seaice.kma.go.kr	- (’15년 11월)
			기상청 위성분석과 070) 7850-5801
7. 기상상담전화 정부민원콜센터 (110번)로 확대 운영	○ 기상상담전화 131번호로만 운영	○ 기상상담전화 131번호와 더불어 110번호 연동체계 구축	- (’16년 4월)
	○ 예보변경 콜백 서비스 - 지역: 서울·경기	○ 기상상담전화 131번호와 더불어 110번호 연동체계 구축	기상청 기상서비스정책과 02) 2181-0860
	○ 외국어상담 서비스 - 평일 9~18시	○ 외국어상담서비스 토·일요일 9~18시로 운영시간 확대	
8. 웹기반 취약계층 생활기상정보 문자서비스 신청 시스템 운영	○ 지자체 공문을 통한 서비스 간접 신청	○ 웹기반의 신청시스템을 통해 서비스 신청절차를 간소화 하고 지자체에 등록되어 있지 않은 다양한 취약계층에게 정보 제공이 가능	- (’16년 4월)
			기상청 기상기술 융합팀 02) 2181-0909
9. 세계기상통신망 전환	○ 한국 - 일본기상청 통신속도: 128Kbps	○ 한국-일본 세계기상통신망을 국제전화선에서 WMO 기간망으로 전환(속도 4Mbps 개선 포함) ○ 위성관측자료의 추가 입수(GNSS Radio Occultation 등) 및 수치예보 활용 - GNSS: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위성항법 시스템	- (’16년 2월)
		기상청 관측기반국 정보통신기술과 02) 2181-0413 국립기상과학원 수치모델연구부 수치자료응용과 02) 2181-6832	

국민안전처			
1. 지자체 안전사고 사망자수 감축 목표 관리제 추진	○ 신 설	○ ’16년부터 ’18년까지 3년간 교통사고, 화재, 자살, 감염병 4개 분야*에 대해 지자체별 사망자수 감축목표를 자율적으로 설정하고 세부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 (’15년 6월)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02) 2100-0422
2. 생활안전지도 전국 확대구축 서비스 개선	○ 115개 시군구 ○ 실시간 서비스 미제공	○ 전국 229개 시군구로 확대 ○ 교통사고 돌발정보 등 6종의 실시간 정보 제공 ○ 쉽고 간단한 정보검색 및 제공 단계로 메뉴구조 개선 (2단계 수준)	재난및안전 관리기본법 (’15년 6월)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02) 2078-7820
3. 빅데이터 기반 「주간안전사고 예보」 분야 확대	○ 안전사고10종 예보 (화재, 농기계, 물놀이, 어린이놀이기구, 산악, 승강기, 붕괴, 폭발, 기계, 추락)	○ 빅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사고 예보 분야 확대 (한파, 폭염 추가 예보)	국민생활주변 안전사고 예보제 운영에 관한 규정 (’16년 1월)
			국민안전처 안전기획과 02) 2078-7820
4. 지붕 제설·제빙 의무화 규정 마련	○ 신 설	○ 폭설시 적설하중에 취약한 시설물 (PEB, 아치판넬 구조)의 지붕 제설·제빙 의무부여	자연재해 대책법시행령 (’16년 상반기)
			국민안전처 자연재난대응과 02) 2100-0717

5. 민간소유 다중이용건축 물의 위기상황 매뉴얼 작성 관리 의무화	○ 신 설		○ 불특정 다수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민간소유 연면적 5천㎡이상인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여객용 운수시설, 종합병원, 관광 숙박시설에서 는 위기상황 매뉴얼을 작성 관리하고 훈련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함 ※ 다만, 민간시설은 시행일 후 3개월 이내 매뉴얼 작성·관리	재난안전법령 (‘15년 12월 31일)
				국민안전처 민관제도담당관 02) 2100-0972
6. 불법 성능인증 소방용품 유통 시 처벌기준 마련	① 성능인증 후 제품검사를 받지 않거나 합격표시를 하지 않고 유통한 경우 벌칙근거 마련	○ 신 설	○ 위반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년 1월)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02) 2100-0867
	② 성능인증의 변경인증을 받지 않은 경우 벌칙 근거 마련	○ 신 설	○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참고) 국민안전처 홈페이지>정책자료>법령정보> 소방 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6년 1월)
				국민안전처 소방산업과 02) 2100-0867

7. 수상구조사 자격제도신설	① 수상구조사 자격 신설	○ 신 설	○ 구조를 위한 전문적인 능력을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에게 자격부여 ○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격취득 후 2년부터 6월 내 보수교육 필수 ○ 부정사용·준수사항 위반 등의 경우, 자격취소 및 정지 가능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6년 7월)
				국민안전처 해양수색구조과 032) 835-2445
	② 수상구조법 하위법령 마련	○ 신 설	○ 시험과목·방법·그 밖에 필요한 사항 ○ 교육기관의 지정 및 취소, 교육과정, 관리·감독 등에 필요한 사항 ○ 보수교육 및 권한 위임에 관한 사항	수상에서의 수색·구조 등에 관한 법률 (‘16년 7월)
				국민안전처 해양수색구조과 032) 835-2445
8. 안전韓-TV 시청 방법 확대	○ PC에서만 시청 가능		○ PC이외 모든 스마트 기기에서도 시청가능 (반응형 웹 구축) ○ 스마트 DMB 앱을 통해서도 시청가능 (참고) 국민안전방송 안전韓-TV 홈페이지 : tv.mpss.go.kr	국민안전처 직제 시행규칙 (‘15년 12월)
				국민안전처 홍보담당관실 02) 2100-0019

보건복지부			
1. 출산진료비 지원 확대	○ 간암 검진주기 1년 ○ 자궁경부암검진 연령 30세	○ 간암 검진주기 6개월 ○ 자궁경부암 검진연령 20세	암관리법 시행령 ('16년 1월) 보건복지부 질병정책과 044) 202-2515
2. 4대 중증질환 유전자검사, 희귀질환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암·희귀질환 진단에 필요한 유전자 검사 비급여 (100% 환자 부담) ○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희귀질환 본인부담 비율 20~60% 적용	○ ('16.1월) 암·희귀난치질환 관련 유전자 검사 134항목 급여 확대 ○ ('16.3월) 극희귀질환 및 상세불명 희귀질환자 산정특례 적용(본인부담비율 10%)	건강보험 행위 급여 목록 고시 ('16년 1월) 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등 ('16년 3월) 보건복지부 보험급여과 044) 202-2745
3. 의료기관 휴·폐업, 장비 등 의료자원 신고(13종)	○ 지자체와 심사평가원으로 신고 이원화	○ 지자체 또는 심사평가원으로 신고 일원화 - 지자체 신고로 일원화(8종) : 의료기관 휴(폐)업 신고, 약국 휴(폐)업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설치 및 사용(재사용)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사용중지·양도·폐기등 신고,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신고사항 변경신고, 특수의료장비 등록신청, 특수의료장비 시설등록사항등 변경통보, 특수의료장비 양도등 통보 - 심평원 신고로 일원화(2종) : 의원급 대진의 신고, 의료기관 의료인수 변경신고 - 지자체 신고로 부분 일원화(3종) : 의료기관 개설·변경신고(허가), 약국개설등록신청, 약국등록사항 변경신청 * 인력·시설 상세현황, 금융계좌 정보 등은 심평원에 추가 신고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의료법 시행규칙 약사법 시행규칙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의 안전관리에 관한 규칙 특수의료장비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보험평가과 044) 202-2780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044) 202-2473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 044) 202-2457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 202-2489 건강보험심사평가원 02) 3019-7217

4. 어린이 국가예방접종 지원 확대	○ 국가예방접종 14종백신 지원	○ 국가예방접종 15종 백신 지원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터>보도자료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4조('16년 상반기-)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043) 719-6839
5. 생계급여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확대	○ 118만원 ('15년 하반기, 4인가구)	○ 127만원('16년, 4인가구)으로 확대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알림>보도자료> 기초생활보장제도, '16년 기준 중위소득 4% 인상	국민기초생활보장법 ('15년 7월 개정·시행)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044) 202-3052
6. 내일키움통장 지원 확대	○ 자활사업 참여자에게 자활장려금 지급	○ 자활장려금이 내일키움통장 정부 추가 지원으로 전환 - 본인 저축액에 사업단 매출액에서 발생하는 장려금 및 수익금 지원 이외 정부 매칭금 추가 지원	국민기초보장법 시행령 제5조의2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 044) 202-3072, 3077
7. 읍면동 사례관리 사업비 지원	○ 신 설	○ 700개 읍면동에 600만원 지원 (서울 50%, 그 외 지역 70% 지원)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사각지대 발굴에 관한 법률 ('16년 1월)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044) 202-3125
8. 발달 장애인법 시행에 따른 복지서비스 확대	①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신규 설치 (17개소)	○ 신 설	○ 17개소 신규 설치 2016년 4월 이후
	② 행동발달 증진센터 신규설치 (2개소)	○ 1개소 운영중	○ 2개소 신규 추가 설치 '16년 4월 이후
	③ 가족휴식 지원 서비스 예산 2배 확대	○ 사업예산 5억	○ 사업예산 10억 '16년 4월 이후
	④ 공공 후견서비스 확대	○ 신 설	○ 후견인후보자 교육 및 발달장애인 권리행사를 돕는 후견법인을 지정 등 '16년 4월 이후

9. 중증 장애인 자립생활 지원 강화를 위한 활동 지원 급여 대상 확대	① 활동지원 급여 대상자 확대	○ 57,500명	○ 61,000명	'16년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 202-3341
	② 최중증 장애인 활동 보조가산급여 지원	○ 신 설	○ 사업예산 12억	'16년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 202-3341
	③ 활동보조급여 단가 인상	○ 8,810원	○ 9,000원	'16년 1월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 044) 202-3341
10. 전 국민 대상 노후 준비 서비스 시행	① 서비스 대상 확대	○ 국민연금가입자, 가입자였던 자 및 수급권자 (2,900만명)	○ 전 국민(5,100만명)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노후준비지원법, 국민연금법 ('15년 12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과 044) 202-3367
	② 서비스 영역 확장	○ 재무 중심	○ 재무 외에 건강·여가·대인관계 등 영역 등으로 서비스 내용 확장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노후준비지원법 ('15.12월)	노후준비지원법, 국민연금법 ('15년 12월)
		○ 상담·교육 및 관련 전문가와의 연계 등 서비스	○ 진단, 상담, 교육, 관계기관 연계 및 사후관리 등 서비스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체계적인 노후준비, 국가가 도와드립니다	
11. 아동발달지원계좌, 기초수급가구 아동 가입 연령 확대		○ 만 12세 기초수급 가구 아동	○ 만 12세, 만 13세 기초수급가구 아동	'16년 1월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 202-3417
		○ 기초수급가구 (최저생계비 기준)	○ 기초수급가구(중위소득 40%, 생계/의료)	

12. 입양아동 양육수당	○ ('15년)만15세 미만까지 월15만원 지급 (국내 입양가정)	○ ('16년) 만16세 미만까지 월15만원 지급 (국내 입양가정)	입양특례법 제35조 (양육보조금 등의 지급) ('16.1.1) 보건복지부 아동복지정책과 044) 202- 3413
13. 노인돌봄 종합서비스 대상자 편의 확대	① 서비스 대상자 (추계): 3만명	○ 서비스 대상자(추계): 3.8만명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07년 5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 202-3459
	② 서비스 시행중인 대상자 및 서비스 해지자에 대한 본인부담금 환급 규정 부존재	○ 본인부담금 환급절차 개선 - 서비스 시행중인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과입금시 행복e음 통해 환급하거나, 다음연도 본인부담금으로 사용가능 - 서비스 해지자에게는 해지 후 60일 이내에 자동 환급 실시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07년 5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 202-3459
	③ 바우처카드 발급횟수 월5회 (매월 4, 11, 19, 22, 26일)	○ 바우처카드 발급횟수 확대 - 매주 월, 목요일 8회	노인복지법,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07년 5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 202-3459
14. 노인 사회활동지원	① (사업명칭) 노인사회활동 지원	○ (사업명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16년 1월 ~
	② (사업규모) 33.7만명* * 추경예산 3.3만 명 별도	○ (사업규모)38.7만명	
	③ (공익활동 대상) 기초연금수급자 (일부 프로그램 미수급자 포함)	○ (공익활동 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노인정책관 노인지원과 044) 202-3472
	④ (취업창업활동) 3.8만명	○ (취업창업활동) 4.9만명 고령 근로자 사회적 인식개선 추진	
	⑤ (전담인력 인건비) 월116.7만원 (1,929명)	○ (전담인력 인건비) 월126.1만원(2,318명)	

15. 노인 무릎인공 관절수술 지원 대상 확대	○ 전국가구 평균소득 4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로 확대	노인복지법 (’15년 3월)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044) 202-3458
16. 시간제보육 서비스 제공기관 확대	○ 전국 230개	○ 2016년 시간제보육반 380개로 확대 (참고) 임신육아종합포털 아이사랑 > 어린이집 > 시간제보 육사업	영유아보육법 (’14년 3월~)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 044) 202 -3569
17. 복수사업장 월 60시간 이상 단시간 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 가입 허용	○ 개별 사업장의 근로시간이 월 60시간 이상인 경우 사업장 가입 허용	○ 개별 사업장에서는 월 60시간미만 근무하더라도, 복수사업장에서 합산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단시간 근로자의 사업장가입 허용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알림 > 보도자료 > “시간제 근 로자, 18세 미만 근로자 연금보험료 본인부담분 반으로 줄 어든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16년 1월 1일)
			보건복지부 국민연금정책과 044) 202-3633
18. 위조·불량 의약품 차단 시스템 本格 도입	○ 일련번호 일부 부착 ○ 의약품 공급시 익월말일까지 공 급내역 보고	○ 전문의약품 일련번호 부착, 의약품을 출하할 때 일련번호 보고 (참고)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의약품유통경로 한눈에본다	약사법 시행규칙 (’16년 1월)
			보건복지부 약무정책과 044) 202-2487
19. 건강보험용 한약제제 제형 다변화 추진	○ 산제(가루약)만 인정	○ 연조엑스제(짜먹는약), 정제(알약) 등 다양한 제형 인정	’16년 1월 예정
			한약약산업과 보험약제과
20. ICT를 활용한 복지 사각지대 발굴 지원	○ 담당 공무원의 인적 네트워크를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 정보시스템을 통한 사각지대 대상자 발굴, 지원 업무 수행	사회보장 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정 (’14년 12월)· 시행(’15년 7월)
			보건복지부 복지정보과 044) 202-3161

고용노동부				
1.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 요건 완화 등	임금피크제 지원금 지원요건 완화	○ 10~20%	○ 10%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15년 12월)
	근로시간단축 지원금 신설	○ 신 설	○ 주 소정근로시간 32시간으로 단축 시, 감액임금의 1/2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보도자료 > 피크임금 대비 10% 이상 임금 감액 시 연간 최대 1,080만원까지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15년 12월)
2. "아빠의 달" 급여 지급기간 확대		○ 1개월	○ 3개월로 지급기간 확대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 > 정책마당 > 대상자별정책 (여성) > 일·가정 양립 지원	고용보험법 시행령 (’16년 1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 044) 202 - 7472
3. 최저임금액 인상		○ 시간급 5,580원	○ 시간급 6,030원으로 인상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 > 알림마당 > e고용노동뉴스 > 보도자료)고용노동부, ’16년도 최저임금 시간당 6,030원 으로 고시	고용노동부 고시 (2015-39호) (’15년 8월 5일)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 044) 202 - 7529/7535

4. 직장어린이집 보육교사 등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액		○ 80만원	○ 60만원으로 축소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정책마당>대상자별정책 (여성)>일·가정 양립 지원	고용노동부고시 (’16년 1월)	고용노동부 여성고용정책과(044) 202-7479
5. 해외취업 연수 대학 장기 교육 과정 확대	① (가칭) 청해진 대학	-	○ IT, 건축, 금융 등 전문 직종을 중심으로 학과 또는 과정 을 선정하고 장기지원(최대 2년)으로 확대 ○ 해외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 대학(학과 또는 과정)을 선 정, 중장기적으로 통합 프로그램(기술+어학+문화+생 활정보)를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 / 해명자료> 연간 1만명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발표	청년고용촉진특별법 제 12조 (’09년 10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 202-4794
	② 해외취업 성공장려금	○ 취업자 1인당 300만원 지원	○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신흥국 진출 청년 에 대하여 1인당 최대 400만원 지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보도 / 해명자료> 연간 1만명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발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 (’09년 10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044) 202-4794
	③ 민간취업 알선지원금	○ 1인당 200만원을 알선기관에 지원	○ 1인당 최대 300만원 지원 (연봉구간에 따라 차등 지급) (참고) 고용노동부홈페이지>보도 / 해명자료>연간 1만명 「청년 해외취업 촉진대책」 발표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제12조 (’09년 10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지원과 044) 202-4794

6. 청년취업 인턴제 양질의 일자리 취업 기회 확대	① 강소·중견 기업 지원 규모 확대	○ 2015년 1.5 만명	○ 2016년 3만명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16년 1월)	고용노동부 청년취업 지원과 044) 202-7446
	② 정규직 전환 지원금 지원기간 확대	○ 인턴 수료하고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총 390만원 지 원비급여	○ 인턴수료하고 정규직 전환후 6개월 이상 고용유지 시 195만원, 12개월 이상 고용유지시 195만원 각각 지원 (총 390만원)	청년취업인턴제 시행지침 (’16년 1월)	
7. 장애인 고용부담금 부담기초액 인상		○ 71만원	○ 75만 7천원으로 인상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알림마당>알려드립니다>공 고>장애인고용부담기초액 결정 고시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 업재활법 고시 (’16년 1월)	고용노동부 장애인고용과 044) 202-7483
8.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단가 인상		○ 중증여성 장애인 50만원	○ 중증여성 장애인 지급단가 60만원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훈령,예규고시>장 애인고용장려금 지급기준	장애인고용장려금 지급 기준(고시) (’16년 1월)	
9. 공동근로복지기금 도입		○ 신 설	○ 둘 이상의 기업이 공동으로 이익금의 일부를 출연하여 공동근로복지기금 설치 가능 (참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법령정보>최근제개정법령> 근로복지기본법 일부개정	근로복지기본법 (’16년 1월 21일)	고용노동부 퇴직연금복지과 044) 202-7561

국방부			
1. 군무원 채용시험 응시자격증 적용기준 개선	○ 채용직렬별 공채 응시자격 자격증, 면허증 필수	○ 필수 11개 직렬(사서 등)을 제외한 직렬은 응시자격증, 면허증을 가산점 부여로 개선 - 토목 등 30개 직렬/ 자격증별 3~5%	군무원인사법 시행규칙, 군무원인사관리훈령 (’16년 1월)
			국방부 인사기획관리과 02) 748-5105
2. 윗몸 일으키기 시행방법 개선	○ 목 뒤 깎지 낀 윗몸 일으키기	○ ‘교차 윗몸 일으키기’로 개선	부대관리 훈령 (’16년 전반기)
			국방부 병영정책과 02) 748-5157
3. 성폭력 예방교육 확대 실시	○ 연간 1회	○ 분기 1회 실시로 확대 ○ 미이수자 인사상 불이익 부여 * 지휘관 보직 및 진급심사대상 제외	국방 인사관리 훈령 (’15년 9월 16일)
			국방부 여성정책과 02) 748-5175
4. 군내 「성폭력 신고앱」 개발, 운영	-	○ 앱을 통한 성폭력 신고 및 상담	-
			국방부 국방여성정책과 02) 748-5176
5. 학생예비군 학업보장 조항 신설	○ 직장 보장 조항만 존재	○ 학업보장 신설	향토 예비군 설치법 및 병역법 (’16년 3월 이후)
			국방부 예비전력과 02) 748-5225

6. 예비군 훈련 입, 퇴소 중 부상, 사망 시 국가보상	○ 임무수행 또는 훈련 중에만 보상	○ 예비군이 의무이행(훈련 등)을 위해 이동 중 부상을 입거나 사망한 경우에도 국가가 보상하도록 그 적용 범위를 확대	향토예비군 설치법 및 병역법 (’16년 3월 이후)
			국방부 예비전력과 02) 748-5238
7. 예비군 훈련면제 기준 강화	○ 해외출국자 180일 이상 시 훈련 면제	○ 해외출국자 365일 이상 시 훈련면제	예비군 교육 훈련에 관한 훈령 (’16년 1월)
			국방부 예비전력과 02) 748-5245
8. 동원예비군 대상 지휘서신 발송 방법 개선	○ 전자메일 또는 군사우편으로 발송	○ 전자메일 및 군사우편 외 문자서비스를 추가하여 발송	국방부 예비군교육훈련에 관한 훈령 (’16년 1월)
			국방부 자원동원과 02) 748-5225
9. 전우사랑보험 지급 대상 확대	○ 의무복무하는 현역병 및 상근예비역	○ 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까지 확대	군인복지기금법 (’16년 3월)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1
10. 병 봉급 인상 (15%)	○ 병 봉급 - 이병 129,400원 - 일병 140,000원 - 상병 154,800원 - 171,400원	○ 병 봉급 인상(15%) - 이병 148,800원 (증 19,400원) - 일병 161,000원 (증 21,000원) - 상병 178,000원 (증 23,200원) - 병장 197,000원 (증 25,600원)	공무원보수규정 (’16년 1월 1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11. 군인 수당 인상	특수지 근무수당(병)	○ 갑지역 :16,500원 ○ 을지역 :13,200원	○ 갑지역 : 25,000원 ○ 을지역 : 20,000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 - 6613
	부사관 장려수당 (해병대토우, 전차중대 근무자)	-	○ 3~10년 : 50,000원 ○ 10년 이상 : 70천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 - 6613
	항공수당(갑) 1호	○ 영관 :1,040,600원 ○ 대위 : 831,600원 ○ 중소위 : 639,100원	○ 영관 : 1,092,600원 ○ 대위 : 873,200원 ○ 중소위 : 671,100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 - 6613
	선박 및 함정 근무수당(갑) 1호	○ 위관 : 547,000원	○ 위관 : 565,000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 - 6613
	선박 및 함정근무수당 (을)1호 (함정근무 항공기 정비요원)	-	○ 원·중사 : 237,200원 ○ 하사 : 146,400원 ※ 기수령 중인 기술수당 지급 제외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 - 6613
	잠수함 출동가산금	○ 1일 9,000원	○ 1일 10,000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 - 6613

11. 군인 수당 인상	위험근무 수당(을)1호	○ 영관 : 90,000원 ○ 위관 : 74,000원 ○ 원중사 : 69,000원 ○ 하사 이하 : 50,000원	○ 영관 : 128,000원 ○ 위관 : 103,600원 ○ 원중사 : 96,000원 ○ 하사 이하 : 75,000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 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 - 6613
	위험근무 수당(병)호 (한병 현장 감식요원)	-	○ 영관 : 37,000원 ○ 위관 : 29,000원 ○ 원중사 : 25,000원 ○ 하사 이하 : 18,000원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 - 6613
	위험근무 수당 가산금 (병)	-	○ 특수임무수행 병사 1일 3,000원 가산금 지급 ※ 특전사, UDT / SSU, 해병대신속대응 부대 근무 병사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 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 - 6613
	대우수당 (예비전력 군무원)	-	○ 기본급의 4.1%	「군인 등의 특수근무수 당에 관한 규칙」 (16년 1월 1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 - 6613

12. 나라 사랑 카드 2차 사업 시행	군 마트 이용요금 적립	-	○ (A은행)이용금액에 따라 5~20% 할인 ○ (B은행)전월실적에 따라 최대 10% 할인	(‘15년 12월 19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ATM 수수료	○ 1일 9,000원	○ 당행/타행 무관하게 무제한 면제	(‘15년 12월 19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교통카드 할인 (대중교통)	-	○ (A은행)20% 할인(최대 1만원) ○ (B은행)5% 할인(최대 2천원)	(‘15년 12월 19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공중전화 요금 할인	○ 일반공중전화 대비 20~30% 할인	○ 종전 할인에서 10% 추가 할인	(‘15년 12월 19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병 무료 상해보험	○ 급여이체자 대상 ○ 영외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6천만원 ○ 영외일반사고시 1천만원	○ (공통)카드 보유자 대상 ○ (A은행) - 영외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1억원 - 영외 일반사고시 최대 5천만원 * 영내 화재, 폭발, 붕괴사고시 최대 5천만원 ○ (B은행) - 영외 대중교통 이용시 최대 5천만원 - 영외 일반사고시 최대 1천만원	(‘15년 12월 19일)	국방부 복지정책과 02) 748-6613

13.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설립		○ 대대급 이상 병영도서관 운영	○ 격오지 부대 독서카페 추가 설립	병영도서관 운영훈령 (‘14년 11월 28일)
				국방부 문화정책과 02) 748-6706
14. 보호 구역 관련 제도 개선	관할부대 협의기간 단축	○ 30일	○ 사전상담을 거친 경우 관할부대 협의기간이 20일로 단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16년 3월 2일)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02-748-5844
	관할부대 협의 생략	○ 개인묘지만 설치	○ 개인·가족의 자연장지 추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15년 11월 18일)
				국방부 군사시설재배치과 02) 748-5844

방위사업청			
1. 방위력개선사업 관련 정보공개 조기제공	○ 사업예비설명회를 사업추진기본전략이나 양산계획 확정 후 제안요청서 작성 전 1회 개최	○ 사업의 특성등을 고려 필요한 경우 입찰공고 전에 수시 개최 ○ 사업 예비설명회를 위한 공고 시 설명회 참석을 원하는 일 반업체 및 비밀취급 미인가자의 신원조사 기간 등을 고려 하여 공고기간을 충분히 설정 ○ 사업부서장은 필요시 군사기밀보호법 제8조(기밀의 제공 및 설명) 및 동법 시행령 제8조(기밀의 제공 및 설명)에 따 라 소요결정 문서에서 합동무기체계기획서와 국방중기계 획 열람본 항목을 열람시킬 수 있도록 함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방위사 업관리규정 일부개정」 시행 발령	방위 사업관리규정 (’15년 8월)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02) 2079 - 6305
2. 군용 화약류 시험시료 품질보증의무화	○ 신 설	○ 수출 등을 위해 군용 화약류를 시험기관(국방과학연구소, 국방기술품질원)에 시험을 의뢰하고자 할 경우에는 국방 기술품질원의 품질보증을 받도록 함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방위사 업관리규정 일부개정」 시행 발령	방위 사업관리규정 (’15년 10월)
			방위사업청 획득정책과 02) 2079 - 6308
3. 업체 기술료 부담 완화	○ 연구개발 참여업체 기술료 면제조항 부재	○ 연구개발 주관업체 및 협력업체에 기술료 면제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국방과 학 기술료 고시」 개정 발령	국방과학 기술료 산정 정수방법 및 정수절 차 등에 관한 고시 개정 (’15년 12월)
			방위사업청 기술기획과 02) 2079 - 6387

4. 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도입	○ 사업중단사유 - 일정 및 비용측면에서 계획당시의 목표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 전시·사변·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 - 연구개발 주관기관의 건의 가 있는 경우	○ 비리의혹 또는 문제점 등이 식별된 사업 추가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비리의혹 또는 문제 식별사업 등 일시 중단제도 마련	방위사업 관리규정 (’16년 1월)
			방위사업청 사업분석과 02) 2079 - 6533
5. 국산항공기 수출 경쟁력 제고 및 군감항인증제도 체계화	○ 900개 기준 항목	○ 952개 항목으로 적용기준 확대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보도자료>표준감항인증제도 개 정	청고시15-2 표준감항인증 기준 (’15년 11월)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02) 2079-6843
	○ 신 설	○ 수출항공기 감항인증 절차 신설 등 감항인증 제도 보완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보도자료>표준감항인증제도 개 정	청훈령342호 군용항공기 비행안정성 인증에 관한 업무규정 (’15년 10월)
			방위사업청 인증기획과 02) 2079- 6843

6. 군수품 선택계약제도 시행	○ 신 설	○ 군수품 만족도 향상을 위한 수요자인 군이 물품을 직접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는 수요군 중심의 조달체계 구축 - 군수품 선택계약 대상 수요물자 규정 - 다수의 계약상대자를 결정하는 심사 기준 규정 - 불량한 계약상대자를 차기공고일로부터 1년간 배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등	청훈령336호 군수품 선택계약 업무처리 규정 ('15년 7월)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군 수품 선택계약업무처리 규정	방위사업청 일반장비계약 02) 2079 - 4551
7. 국외조달원에 대한체계적인 등록관리 시행	○ 신 설	○ 신규 등록 시 업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와 서명권자 재직증명서 추가 ○ 입찰심사 전까지 등록정보 최신화 및3년마다 일제정비 실시 ○ 제조능력에 대해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신용평가기관 정보제공 의뢰	조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15년 7월)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조 달원 등록정보 관리지침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02) 2079 - 4114
8. 낙찰자 결정을 기술력 중심의 평가체제로 개선	○ 가격평가의 비중도가 기술능력 평가의 비중도 보다 높음	○ 가격평가의 비중을 축소하고 기술능력 평가비중을 확대 ○ 기술평가 시 벤처 인증 기업에 대한 가점 적용	물품 적격심사 기준 ('16년 5월)
		(참고) 방위사업청 홈페이지>업무·정책>법령>행정규칙>물 품 적격심사 기준	방위사업청 조달기획관리팀 02) 2079-4173
9. 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 및 수출,중개업 신고 대상 확대	○ 수출허가 기관 - 일반방산물자 : 산업통상자원부 - 주요방산물자 : 방위사업청 ○ 수출·중개업 신고대상 - 주요방산물자 수출시	○ 수출허가 기관 - 일반 / 주요방산물자 : 방위사업청	방위사업법 ('15년 9월 28일)
		○ 수출·중개업 신고대상 - 일반 / 주요방산물자 수출시	방위사업청 방산기술통제관 02) 2079-6831~9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알림·소식>보도자료>방산물자 수출 허가기관 일원화와 수출허가 면제 신설	

병무청			
1. 모집병 선발 시 성적반영 폐지	○ 수능(내신) 성적 반영 선발	○ 자격, 면허 및 전공 위주로 선발	현역병모집 업무규정 ('15년 12월)
			병무청 현역모집과 042) 820- 2720
2.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	○ 우선 재징병검사 신청 외 별도 기간 내 실시	○ 재징병검사 일자 및 장소 본인선택제로 재징병검사 일자 등 확대	재징병검사 규정 ('16년 1월)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 481-2948
3. 나라사랑카드 제휴금융은행 복수제도 도입	○ 신한은행(단수)	○ 국민은행, 기업은행 중 택 1	병역법시행 규칙 제9조
			병무청 징병검사과 042) 481-2941
농림축산식품부			
1. 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 융자사업 대출금리 2.5~2.7%	○ 융자사업 대출금리를 2.0%로 인하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농업정책자금 금리인하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업금융정책과 044) 201- 1756
2. 국산 쌀 중국 수출 개시	○ 수출 불가	○ 중국 수출 가능 - 수출을 희망하는 업체는 가공공장을 등록하고 중국 측 실사를 받아야 함 - 수출 전 훈증소독을 실시해야 함 - 수출 검역에 합격하여야 함 (참고) 농림축산검역본부홈페이지>국민소통>법령정보>검역본부 고시>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	식물방역법, 시행규칙, 고시 ('16년 1월, 잠정)
			농림축산식품부 검역정책과 044) 201- 2074

3. 농식품 벤처창업 활성화 지원	○ 신 설	○ 기술가치평가 지원(건당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 ○ 농촌현장 창업 보육 지원(전문가 컨설팅비 지원, 최대 1천만원, 자부담 20%) ○ 농산업체 판매지원(시제품 판매관 운영) ○ 농식품 전문 크라우드 펀딩 플랫폼 운영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청년 일자리, 농업·농촌에서 찾으세요	- (‘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과학기술정책과 044) 201-2453
4. 청년농산업 창업지원	○ 신 설	○ 청년 창업농 300명 선발 ○ 창업초기 창업안정자금 지원(최대 2년간 월 80만원) ○ 창업 네트워크 구축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청년농 산업창업지원사업	- (‘16년 4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정책과 044) 201-1518
5.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지원	○ 신 설	○ 시범사업 대상 6개 지구 선정·지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활기찬 농촌프로젝트 시범사업	농어업인 삶의 질 농어촌정비법 (‘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지역개발과 044) 201-1554
6.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절차 간소화	○ 건강·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 인 여부 확인 필요	○ 농어업경영체 등록자가 건강, 연금보험료 지원 신청 시 농어업인 확인절차 생략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농어업인 건강,연금보험료 지원사업	- (‘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 201-1574

7. 농어촌 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조건 변경	○ 농어촌지역 단순거주자 (비농어업인) 에 대한 지원 요건	○ 소득분위와 관계없이 지원	○ 농촌거주 비농어업인은 소득 8분위까지만 지원 * 농촌거주 농업인 및 취약계층은 소득에 관계없이 현행 대로 지원 (참고) 한국장학재단홈페이지 > 학자금대출안내 > 학자금대 출소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관련공지(6번)	’16년 1학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 201- 1578
	○ 연체이자 도입	○ 연체이자 없음	○ 연체이자 부과 : 연체기간 3개월 이하(3%), 6개월 이하(6%), 6개월 초과(9%) (참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안내 > 학자금대출소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관련공지 (6번)	’16년 1학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 201- 1578
	○ 신용유의자 등록기준 변경	○ 연체 10개월 이상 시 신용유의자 등록	○ 연체 6개월 이상 시 신용유의자 등록 (참고)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안내 > 학자금대출소개 > 농어촌출신대학생학자금융자 > 관련공지 (6번)	’16년 1학기부터 농림축산식품부 농촌복지여성과 044) 201- 1578
8. 가축 질병 취약 분야 관리 강화	○ 중점방역 관리 기구	○ 신 설	○ 중점방역관리지구 지정 운영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가축전염병예방방법	가축전염병예방방법 및 하위법령 (‘15년 12월 23일)
	○ 벌칙 및 과태료 상향	○ 벌칙 : 전염병 미신 고시 범칙금 1천만 원 이하 ○ 과태료 : 소독시설 미설치, 백신 미접종시 5백만원 이하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가축전염병예방방법	○ 벌칙 : 3천만원 이하 ○ 과태료 : 1천만원 이하	
	○ 축산차량 GPS 장착대 상 확대	○ 가축·원유·알· 동물약품·사료· 가축분뇨·왕겨·퇴비 운반차량	○ 조사료·가축분뇨·퇴비·왕겨·쌀겨·톱밥·갈짚 운반차량으로 확대 * 2016년 3월 23일까지 등록 완료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가축전염병예방방법	농림축산식품부 방역총괄과 044) 201-2360

9. FTA 피해보전 직불제 보전비율 상향 등	○ 보전비율 90% 지원 ○ 이의제기 절차 없음	○ 보전비율 95%로 인상 ○ 대상품목, 수입기여도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FTA피해 보전직불제 개선	FTA농어업법 (‘16년 상반기)
			농림축산식품부 농업정책과 044) 201- 1719
10. 학교 우유급식 사업 지원대상 확대	○ 저소득층 가정의 초, 중, 고교생, 한부모가족보호대상 자, 특수교육 대상자, 차상위계층 가정의 초등학생, 기타 시도 에서 선정한 형편이 어려운 초, 중, 고교생	○ 초·중학생의 경우, 당초 기초생활수급자 중 교육급여 수급자(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까지 확대 지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 학교우유급식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 201- 2340
11.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 도입	○ 신 설	○ 친환경농업인 등은 회원가입, 자조금 납부 동의서 제출 및 자조금을 납부해야함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공지·공고 > 2016 년 상반기부터 친환경농산물 의무자조금제도 도입	농수산물자조금의 구성 및 운용에 관한 법 (‘16년 4월 예정)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농업과 044) 201- 2436
12. 창조 농업 선도고교 및 농대 영농창업특성화 사업 지원	○ 농고 : 산업연계교 육사업 ○ 농대 : 미래 전문 농업 경영인 사업	○ 농고 : 창조농업선도고교사업 신규 추진 (3개 학교) ○ 농대 : 영농창업특성화사업 신규 추진 (5개 학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젊고 유 능한 청년 창업농, 미래농업을 이끈다	- (‘16년)
			농림축산식품부 경영인력과 044) 201- 1538

13. 축사시설현대화 지원 제도 개선	○ 지원조건 : 보조 30%, 융자 50%(3년 거치 5년 상환), 자부 담 20% ○ 사업대상 : '14.12.31 이전부터 축산업 등록 허가 후 가축을 사육 중인 농가와 법인	○ 보조 20%, 융자 60%(5년거치 10년 상환), 자부담 20% ○ 농장 실무경력 10년 이상이거나, 축산관련학과 졸업자(50 세 이하)까지 지원 대상자 확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축사시설현대화사업	농림축산식품 사업시행지침서 (‘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044) 201- 2336
14. 한-뉴질랜드 FTA에 따른 농업분야 협력	○ 신 설	○ 농축산업 훈련 비자 : 50명 ○ 농촌지역 청소년 어학연수 : 150명 ○ 한-뉴 농업협력장학금 : 수의과학, 산림분야별 매년 최대 2명 ○ 질병위험 분석(6명), 산림연구(1명) 전문가 훈련 · 연구 지원 ○ 수의과학분야 국제 워크숍 개최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한-뉴질 랜드 FTA 협력사업	한-뉴질랜드 FTA 협력 챕터 (‘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 201- 2320
15. 가축사육업 허가·등록 대상 확대	○ 허가대상 - 소 : 300㎡ 초과 - 돼지 : 600㎡ 초과 - 닭 : 950㎡ 초과 - 오리 : 800㎡ 초과	○ 허가대상 : 소규모까지 확대 - 소 · 돼지 · 닭 · 오리 : 50㎡ 초과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축산법 시행령	축산법 시행령 (‘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 201- 2330
16. 축산관련 종사자 온라인 보수교육 시행	○ 신 설	○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온라인 상시교육 운영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축산관련종사자 온라인 교육 프로그램 개발 실시	- (‘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과 044) 201-2317

17. 광역축산 악취 환경 개선 지원	○ 신 설	○ 광역축산악취환경개선 지원 사업 신규 시행 - 3개시도 선정하여 40억원 내외 지원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농림축산식품사업시행지침서 > 가축분뇨처리시설 지원 사업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 (’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친환경축산팀 044) 201- 2375
18.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개선	○ 폐기물처리 시설 설치 승인서 또는 설치신고 증명서 의무 제출	○ 폐지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16년 1월)
	○ 동물화장시설 잔류성 유기오염물질 검사 (2년 1회)	○ 제외	
	○ 동물건조장 시설 정기검사(3개월 1회)	○ 6개월 1회로 검사 주기 완화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알림소식 > 보도자료 > 동물장묘업 등록기준 등 개선	농림축산식품부 방역관리과 044) 201-2383
19. 농업보조금 집행 및 관리 투명성 제고	○ 지원되는 보조금이 5 억 원(농기자재 구매 등은 1억 원)을 초과 하는 경우 지자체가 입찰을 통해 선정 ○ 지원되는 보조금이 5 억 원 이상인 경우 집 행내역에 대하여 전문 회계법인의 검증을 받 은 후 정산	○ 보조사업 규모가 2억원(물품 및 용역 구매는 5천만원)을 초 과하는 경우 지자체·조달청에 위탁하거나 국가종합전자조 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선정 ○ 지원되는 보조금이 3억원 이상으로 확대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농림축 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훈령 (’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창조행정담당관 044) 201-1384

20.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	○ 신 설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 기본계획 수립·시행 ○ 우수 농산물 직거래 사업장 인증제 시행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지역농산물 이용촉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지역농산물 이용촉 진 등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에 관한 법률 (’16년 6월)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044) 201-2217
21.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	○ 신 설	○ 차산업 발전 등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행 ○ 차의 품질 등의 표시 기준 설정 및 표시제 시행 (참고) 농림축산식품부 홈페이지 > 국민소통 > 법령정보 >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16년 1월)
			농림축산식품부 원예산업과 044) 201-2240
식약처			
1. 순대, 계란, 떡볶이 떡 등의 해섵 적용 확대	○ 떡볶이떡은 ‘20년까지 의무적용 * 순대, 계란은 해섵 의 무적용 대상이 아님	○ 떡볶이떡 생산업체 중 종업원수 10인이상인 곳을 ‘17년까지 의무적용토록 조정 (→ 전체 생산량의 90%가 해섵적용) ○ 순대, 계란 가공식품을 해섵 의무적용 품목으로 추가 (→ ‘17년까지 모든 업체가 해섵 적용)	식품위생법, 축산물위생관리법 (’16년 1월, 잠정)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소비안전과 043) 719- 2856 축산물위생안전과 043) 719- 3246

2.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범위 확대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보상 범위 : 사망	○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 보상 범위 : 사망 + 장애 + 장례비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에 관한 규정 (’16년 1월 1일)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평가과 043) 719-2705
3. 중앙급식 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미설치	○ 중앙급식관리지원센터 설치·운영 * 법적근거(14. 1. 28)마련에 따라 2016년도부터 운영 (참고) 식품의약품안전처 홈페이지 > 분야별정보 > 식품영양 > 관련사이트 >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15년 1월 29일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 중앙센터 TF팀 043) 719-2313

문화체육관광부

1. 관광진흥법 개정 - 관광호텔 건립 규제 완화	○ 학교 인근 관광호텔 설립 시 학교환경위생정화 위원회의 심의 필요	○ 학교 출입문으로부터 75미터 이상 떨어진 구역에서 는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 심의 없이 건립 가능 (참고) 국회 의안정보시스템 > 의안검색 > 관광진흥법(의안 번호 1902169)	관광진흥법 (’16년 3월)
			문화체육관광부 관광산업과 044) 203 - 2834
2. 박물관·미술관 등록요건	○ 안전 관련 사항은 ‘화재·도난 방지 시설’만 규정	○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에 따른 소방시설의 설치와 피난유도 안내정보의 부착이 등록기준에 추가 (참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_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 법 시행령	박물관·미술관 진흥법 시행령 (’16년 4월 7일)
			문화체육관광부 박물관정책과 044) 203 - 2643

미래창조과학부

1. 저소득층 통신요금 감면 대상자 확대	○ 기초생활수급자 : 이동 전화 및 유선서비스요 금감면 ※ 기초생활수급자 분류 : 최저생계비 기준 100%이하	○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 이동전화 및 유선서비스 요금감면 ○ 주거·교육급여 수급자(가구원 포함) : 이동전화 요금 감면(가구당 4인 한도) ※ 맞춤형 급여 수급자 분류 : · 생계·중위소득 기준 30% 이하 · 의료·중위소득 기준 40% 이하 · 주거·중위소득 기준 43% 이하 · 교육(학생 한정)·중위소득 기준 50% 이하	전기통신사업법 시행령 (’16년 1월 1일)
			미래부 통신경쟁정책과 02) 2110-1927
2. 한도 초과 고지 확대	○ 사용량 한도 초과 이후 이용자에게 데이터서비스만을 단 계별로 고지	○ 사용량 한도 초과 이후, 음성 / 문자메시지 / 데이터 서비스를 모두 단계별로 고지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 · 알림 > 법령정보 > 훈령·예규·고시	요금한도 초과 등의 고지(고시) (’16년 6월)
			미래부 통신이용제도와 02) 2110 - 1935
3. 창조경제혁신센터	○ 창업지원기능 중심	○ 청년일자리 지원기능(고용존) 신설 - 양질의 일자리를 발굴하여, 이를 청년 구직자와 매칭 - 전담 대기업 인프라, 산업계 네트워크를 활용한 우수 교육훈련과정 기획·운영 - 취·창업을 아우르는 일자리 상담서비스 제공	(’16년 4월)
			미래부 창조융합 기획과 02) 2110 - 1733
4.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의 활용 지양, 질적/사업화 성과지표 활용 유도	○ 의무 규정 없음	○ SCI 단순 논문건수 지표 지양 ○ 질적지표 가중치 60% 이상 의무화 ○ 사업화 목적 사업의 사업화지표 가중치 50% 이상 의무화 (참고) 보건복지부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미래 부,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목표·지표 점검 실시	성과평가법
			미래창조과학부 성과평가과 02) 2110-2725
5.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 의무화	○ 신 설	○ 상용소프트웨어를 분리발주로 구매할 경우 소프트웨어 품질성능 평가시험(BMT)을 의무적으 로 실시	소프트웨어산업 진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16년 1월)
			미래부 SW산업과 02) 2110-1834

6. 하도급 구조 개선	○ 무제한 다단계 하도급 가능	○ 원도급자는 전체 사업금액의 50%를 초과하여 하도급 할 수 없으며, 재하도급은 원칙적으로 금지 (참고) 미래부홈페이지 > 뉴스·알림 > 뉴스 > 보도자료 > ‘16 년, 공공SW 참여기업 최대 30%까지 매출이 증가한다	소프트웨어산업진 흥법 시행령, 시행규칙, 고시 (’15년 12월)
			미래부 SW산업과 02) 2110-1834
7. 과학기술발전 장려금 운용재원 확대	○ 2,000억 원 조성 (개인부담률 2.5%)	○ ‘16년도 2,100억원으로 확대 (개인부담률도 4.5% 증가) ※ ‘18년까지 3,010억원으로 확대	과학기술인 공제회법 (’09년 1월)
			미래창조과학부 미래인재정책과 02) 2110-2570
8. 연구실 사고예방을 위한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실시	○ 신 설	○ 연구실책임자가 연구개발활동 시작 전에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실시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법령정보 > 사전유해인자위험분석 고시 제정(안) 행정예고	사전유해인자 위험분석 고시 (’16년 3월)
			미래창조과학부 연구환경안전팀 02) 2110-2781
9. 개인기초연구 연구기간과 연구비 탄력지원	○ 리더연구자 : 3~8억 × 9년 (3+3+3) ○ 중견연구자 : 1억/3억×3년 ○ 신진연구자 : 5천 만×3년	○ 개인연구(1개 세부사업) - 자유공모 - 탄력지원 • 리더연구 : 현행 유지 • 일반연구 : 0.1~3억×1~5년 • 신진연구 : 0.1~1억×1~5년 - 전략공모 - 별도 설정	미래부 소관 과학기 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5년 5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 02) 2110-2374
	○ 연간 연구비 고정 ○ 연구계획 조정 불가	○ 연차별 연구비 차등 설정 가능 ※ (예) 1억+1억+1억 >> 1.5억+0.7억+0.3억+0.5억 ○ 타당성 평가를 거쳐 연구내용, 연구비, 연구기간 등 변경 허용	미래부 소관 과학기술분야 연구개발사업 처리규정 (’15.5월)
			미래창조과학부 기초연구진흥과 02) 2110-2374

10. 재외공관 공인인증서 발급 서비스 모든 공관으로 확대	○ 입국하여 공인인증기관을 대면 방문하여 발급	○ 입국절차를 거치지 않고 재외공관을 방문하여 대면 확인 후 참조번호 / 인가코드 수령·발급받은 번호와 카드로 공인인증서 발급	해당없음
			미래창조과학부 정보보호지원과 02) 2110-2921
11. 연구서식 표준화	○ 부처에 따라 26~84개의 연구서식 및 8~58개의 첨부서류 사용	○ 연구단계별로 7종의 표준서식과 첨부서류 9종으로 표준화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뉴스·알림 > 보도자료 > 연구수행 관리서식 표준화	’16년 1월 1일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02) 2110-2732
12. 국가 R&D 연구 책임성 확보	○ 제재 부가금	○ 최대 150%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국가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 한 규정 (’15년 12월)
	○ 사업비 환수금 미납	○ 참여제한 없음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국가 연구 개발 성과 개인 명의 출원·등록	○ 참여제한 1년 (참고) 미래창조과학부 홈페이지 > 정보마당 > 법령정보 > 입법예고 >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미래창조과학부 연구제도과 02) 2110-2732

방송통신위원회			
1. PIMS 인증 기준 조정	○ PIMS 124개	○ PIMS-PIPL 통합으로 86개 인증기준으로 조정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정보통신망법 (’12년 2월) 개인정보보호법 (’15년 7월) 방송통신위원회 개인정보보호 윤리과 02) 2110 -1529
2. 재난방송 의무방송사업자 확대 -유선 및 위성방 송, IPTV에서도 재난방송 실시	○ 69개 의무방송사업자	○ 164개 의무방송사업자로 확대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6년 6월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 2110 -1428
3. 재난정보의 정확하고 신속한 제공을 위한 재난방송 준수사항 마련		○ 재난상황 정보를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 - 대피 · 구조 · 복구 등에 필요한 정보 제공 - 피해자와 그 가족이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생활 침해금지 및 질문과 답변, 회견 등 강요 금지 - 피해자 또는 그 가족 중 미성년자에 대한 인터뷰는 법정대리인의 동의 필요 - 오보시 지체 없이 정정방송 실시 (참고) 방송통신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방송법 및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국회 본회의 통과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16년 6월 예정)
			방송통신위원회 지상파방송정책과 02) 2110 -1428

문화재청			
1. '무형문화재법' 시행에 따른 달라지는 무형문화재 제도	○ (명칭) 중요무형 문화재	○ (명칭) 국가무형문화재	무형문화재법 (’16년 3월 28일)
	○ (범위) 기능, 예능	○ (범위) 전통지식, 생활관습 등 확대 - 전통적 공연·예술 - 공예, 미술 등에 관한 전통기술 - 한의학, 농경·어로 등에 관한 전통지식 - 구전전통 및 표현 - 의식주 등 전통적 생활관습 - 민간신앙 등 사회적 의식(儀式) - 전통적 놀이·축제 및 기예·무예	
	○ (지정제도) 중요무형문화재 지정	○ (지정제도)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국가긴급보호무형문화재 지정제도 추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과 042) 481-4970
	○ (이수 심사 주체 변경) 보유자(보유단체)	○ (이수 심사 주체 변경) 문화재청장이 심사를 거쳐 발급	
	○ (전수교육 제도) 도제식 전수교육	○ (전수교육 제도) 대학을 통한 전수교육 추가 ○ (전수교육대학 선정 및 재정지원 등)	
	○ (진흥정책 강화) 신설	○ (진흥정책 강화) 전승공예품 인증제·은행제 / 무형문화재 전승자 창업·유통·제작 지원 / 원재료 구입 및 전통기술 개발 등	
		(참고) 문화재청홈페이지 > 새소식 > 보도자료 > 유네스코 기준에 맞춘 새로운 무형문화재 관리체계 도입	

여성가족부			
1.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서비스 확대	○ 147개 새일센터를 통한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	○ 새일센터 3개소 추가 지정 및 온라인 취업지원상담 서비 스 전국 확대 ○ 경력단절여성 전문 직업교육훈련 공모사업 시범운영 및 인턴십 지원 확대 (참고) 새일센터 대표전화 ☎1544-1199	- (‘16년 1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지원과 02) 2100-6203	
2. 학교 밖 청소년 건강검진 확대	○ 1,500명 지원 ○ 보건소에서 실시	○ 15,000여명 지원 확대 ○ 지역의 가까운 검진기관 이용 (참고)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표전화 ☎ 1577-1000	청소년복지 지원법 (‘16년)
		여성가족부 학교밖청소년 지원과 02) 2100-6315	
3. 다양한 가족에 대한 포괄적 가족지원서비스 강화	○ 운영시간 : 주중 09:00~18:00	○ 운영시간 : 주중 09:00~21:00 (주말 4시간 이상) * 주 1회 이상 야간, 주말 운영 정례화	- (‘16년 1월)
	○ 지원대상 : 일반다문화 가족 분리	○ 지원대상 : 다양한 모든 가족 * 전업맘 → 전업맘, 워킹맘·워킹대디 * 결혼이민자 중심 → 모든 다문화가족의 구성원 및 자녀지원	
	○ 주요기능 - 가족교육,가족상담, 가족 돌봄 나눔 등 - 다문화가족 조기적응 및 사회·경제적 자립지원(가 족교육·상담, 통번역 등)	○ 주요기능 - 다양한 가족에 대한 보편적·포괄적 가족 지원서비스 제공 - 가족교육,가족상담, 문화, 가족 돌봄나눔 - 취약·위기가족의 역량강화 지원 및 공동육아나눔터 운 영 확대 - 양육정보 제공 및 직장내 고충상담 등 일·가정양립 지원 확대 - 다문화가족 자녀성장지원 강화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정책안내>가족>통합적 가족지 원>건강가정지원센터운영	여성가족부 가족정책과 02) 2100-6326

4. 제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 실시	○ ’13년 실태조사 최초 실시	○ ’15년 시험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제 2차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실시 (참고) 1차 실태조사 결과 : 여성가족부 홈페이지> 정책안내>인력개발>여성새로일하기센터>자료실>’2013년 경력단절 여성등의 경제활동 실태조사 결과보고서	- (‘16년 1월)
			여성가족부 경력단절 여성지원과 02) 2110-6203
5.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대상 확대	○ 공공기관 민간기업 재직여성 등을 대상으로 여성인재 아카데미 교육 지원	○ 문화·예술·체육 분야 여성인재 및 지방공기업 재직여성 등 지역 여성인재를 발굴, 대상별 맞춤형 교육 지원 (참고) 교육신청문의 : 한국양성평등교육진흥원 ☎ 02-3156-6101	- (‘16년 1월)
			여성가족부 여성인력 개발과 02) 2100-6195
6. 여성인재 DB 등재자 대상 맞춤 형 교육 지원 실시	○ 민간기업 및 공공기관 재직여성 대상으로 교육	○ DB에 등재된 여성인재를 경력별 직종별 맞춤형 교육 지원	- (‘16년 1월)
			여성가족부 여성인력 개발과 02) 2100-6195
7. 청소년특별지원 대상자 소득확인 절차 간소화	○ 소득·재산조사 (금융, 부채 등)	○ 건강보험료로 확인 (참고) 여성가족부 홈페이지>뉴스·소식>보도자료> “위기청소년 특별지원 신청서류는 간단히, 지원은 신속히”	청소년복지 지원법 시행령 (‘16년 1월)
			여성가족부 학교밖 청소년지원과 02) 2100-6313
8. 청소년동아리 활동지원 확대	○ 1,460개 동아리 지원 ○ 동아리별로 100만원 지원 ○ 동아리연합회 자율 운영 ○ -	○ 2,100개 동아리 지원 ○ 동아리별 125만원 지원으로 확대 ○ 지역 동아리 연합회 구성·운영(지자체 동아리 예산의 10% 내외 편성) ○ 성과에 따른 동아리 지원 - 우수 동아리 선정·시상 - 거짓·부정으로 운영한 동아리 향후 1년간 지원 중단	청소년활동 진흥법 (‘14년 1월)
			여성가족부 청소년활동 진흥과 02) 2100-6257
9. 위기청소년 지원 확대	○ 지역사회청소년통합지 원체계(CYS-Net) 200 개 운영 ○ 청소년동반자 1,044명	○ CYS-Net 운영 222개 지역으로 확대 ○ 청소년동반자 1,066명으로 확대 (참고) 위기청소년 지원 및 상담전화 ☎ (지역번호) 1388	- (‘16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 2100-6275

10.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변경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상반기(3월) 시행	○ 청소년상담사 자격시험 시행시기 상반기에서 하반기로 변경 * 시행 첫 해인 2016년에는 2회(3월, 10월) 실시	- (‘16년)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02) 2100-6273
11. 다문화가족 자녀성장 지원 프로그램 확대	○ 2개 센터 시범사업	○ 전국 80여개 센터로 확대 실시 ○ 지원대상 : 다문화가족 학령기 자녀 및 부모 ○ 주요내용 - 부모·자녀 관계향상 프로그램 - 사회성 발달 프로그램 - 미래설계 프로그램 - 위기사례 지원 - 유관기관과의 연계 등	- (‘16년 1월)
			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 정책과 02) 2100-6364
12. 한부모 (미혼모·부) 가족 지원 강화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 수당지원 대상 : 24개월 이하의 자녀를 둔 생계급 여수급 청소년 한부모	○ 청소년한부모 자립촉진수당 지원대상 : 생계급여 수급 청소년 한부모(자녀연령제한 삭제) (참고) 신청 및 문의 : 거주지 주민센터	- (‘16년 1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 2100-6346
13. 아이돌봄서비스 소득판정 기준 및 정부지원 내용 변경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6천원 (시간당)	○ 아이돌봄서비스 이용요금 : 6.5천원 (시간당) * 유형별 정부지원금 및 본인부담금 조정	- (‘16년 1월)
			여성가족부 가족지원과 02) 2100-6352, 6350
	○ 이용가정 소득유형 판정기준: 전국가구 평균소득 (4인 가구 기준)	○ 이용가정 소득유형 판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4인 가구 기준)	(참고) 양육수당 신청방법 및 문의 :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복 지로 시스템 온라인 신청, 보건복지부 콜센터 ☎ 국번없이 129

14. 성폭력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신규 지원	○ 해바라기센터 36개소 ○ 성폭력상담소 100개소 국비지원 ○ 장애인성폭력피해자 보호 시설 국비지원 7개소 ○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 시설 설치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 구비 필요	○ 해바라기센터 37개소로 확대 ○ 국비지원 성폭력상담소 104개소로 확대 ○ 국비지원 장애인 성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8개소로 확대 ○ 성폭력 상담원 교육훈련시설 설치신고 시 첨부서류에서 임대차계약서 제외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년 1월)
			여성가족부 권익정책과 02) 6385-6387
15. 성매매 피해자 지원 기관 확대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 센터 10개소 ○ 성매매 피해상담소 26개소	○ 성매매피해자 자활지원센터 11개소로 확대 ○ 성매매피해 상담소 27개소로 확대	- (‘16년 1월)
			여성가족부 권익지원과 02) 6385-6387, 6396, 6398
16.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시설 확충 및 피해자 지원확대	○ 가족보호시설 20개소 ○ 주거지원시설 246호 ○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18명 ○ 보호시설 입소자 (비수급자) 생계비 491 백만원 ○ 신설	○ 가족보호시설 21개소로 확충 ○ 주거지원시설 266호로 확충 ○ 긴급피난처 전담인력 36명으로 증원 ○ 보호시설 입소자(비수급자) 생계비 지원확대 621백만원 ○ 가정폭력 추방주간 시행(11.25~12.1)	- (‘16년 1월)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 2100-6426
17.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확대	○ 월생활안정지원금 104 만3천원 ○ 간병비 월 75만 7천원 ○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안 정지원금 월 35만 6천원 ○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 기」 교육 시범사업 실시 ○ 신설	○ 월생활안정지원금 126만원으로 인상 ○ 간병비 월 105만 5천원으로 인상 ○ 건강치료비 및 정서적 안정지원금 월 37만 9천원으로 인 상 ○ 「일본군 ‘위안부’ 바로 알기」 교육 전국으로 확대 실시 ○ 일본군 위안부 기록물 등 국·내외 전시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생활안정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16년 1월)
			여성가족부 복지지원과 (02-2100-6429, 6430)

인사혁신처				
1.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① 기여율 (공무원)· 부담률 (정부) 조정	○ 기준소득(보수예산의) 7%	○ 9% (1+4년간 단계적 인상) * (16년)8%→(17년)8.25%→(18년)8.5%→ (19년)8.75%→(20년)9.0%	공무원연금법 (’16년 1월)
				인사혁신처 연금복지과 02) 2100-6888
	② 지급률 인하	○ 재직기간 1년당 평균기준소득월액의 1.9%	○ 1.7% (5+5+10년간 단계적 인하) * (20년)1.79%→(25년)1.74%→(35년)1.7%	〃
	③ 소득재 분배 도입	○ 없음 (본인의 평균기준소 득월액)	○ 도입 * 국민연금 상당부분인 지급률 1.0% 해당부분에 소득재분배 요소 도입	〃
	④ 연금지급 개시 연령 연장	○ 2010년 이전 임용자: 60세 ○ 2010년 이후 임용자: 65세	○ 모든 공무원 65세로 단계적 연장 * (22년)61세→(33년)65세	〃
	⑤ 유족 연금액 인하	○ 2010년 이전 임용자: 70% ○ 2010년 이후 임용자: 60%	○ 모든 공무원이 60% * 현재 유족연금수급자는 70%	〃
	⑥ 연금액 한시 동결	○ 매년 물가인상률로 조정	○ 5년간(’16~’20년) 동결	〃
	⑦ 기준소득 월액 상한 조정	○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 월액의 1.8배 (840만원)	○ 1.6배(747만원) * ’15년도 전체공무원평균기준소득월액 467만원	〃

1. 미래 세대를 위한 공무원 연금개혁	⑧ 연금액 지급정지 제도 강화	○ 공무원·군인·사학에 } 재임용시 전액 정지	○ 현행+선거직 및 정부 전액 출자·출연기관 재취업 고액 연봉자 * 고액연봉 : 기준소득월액 상한 초과 소득자	〃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 이 전년도 5인 이상 사업장 근로자평균임금 월액(338만원) 초과시 일부 정지	○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이 전년도 평균연금월액(224만 원) 초과시 일부 정지	〃
	⑨ 분할연금 제도 도입	○ 없음	○ 혼인기간 5년 이상자 이혼시 해당기간 1/2 연금액을 배우자에게 지급 * 당사자간 협의 및 재판 결과 우선 적용	〃
	⑩ 비공무상 장해연금	○ 공무상 장애로 퇴직時 지급	○ 현행+비공무상 장애로 퇴직時에도 지급 * 공상 장해연금의 1/2	〃
	⑪ 연금수급 요건 조정	○ 20년	○ 10년	〃
	⑫ 기여금 납부기간	○ 33년	○ 36년(단계적 연장) * 연금액은 현행 수준으로 제한	〃
2. 의사상자 공무원 채용시험 가점 부여		○ 신 설	○ 6급이하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서 과목별 만점의 3~5%를 가점으로 부여 (참고) 인사혁신처 홈페이지> 보도자료 > 의사상자, 공무원 채 용시험에서 가점 받는다	공무원임용 시험령 (’15년 11월)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 02) 2100-6784
3. 경력단절 여성 등 을 위한 시간 선택제 채용 요건 완화	① 채용요건 완화	○ 퇴직후 3년 이내	○ 퇴직후 10년 이내로 완화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공무원임용령 참조	공무원임용령 (’15년 9월)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02) 2100-6735
	② 임용 대기기간 축소	○ 결원발생시 임용	○ 신원조회 후 임용 (참고) 국가법령정보센터 > 현행법령 > 공무원임용령 참조	공무원임용령 (’15년 11월)
				인사혁신처 인사정책과 02) 2100-6735

법무부			
1. 특허 침해 소송 관할 집중	○ 특허 침해 소송을 전국 58개의 지방법원 및 지원 에서 관할	○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에 관한 소의 경우 1심 관할을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함 -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국관할을 인정함	민사소송법 (’16년 1월)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 2100 - 3166
2. 일반귀화 신청자 생계유지능력 요건 기준 강화	○ 자산기준으로 3천만원 이상 예금잔고증명 또는 그 금액에 해당하는 부동산등기부 등본 (전세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자산 6천만원 이상으로 상향 또는 한국은행 고시 전년도 일인당 국민총소득(GNI)으로 신규 적용 (참고) 법무부 페이지 > 법무뉴스 > 보도자료 > 일반귀화허가신청 시 생계유지능력 요건 강화	국적법시행규칙 (’16년 3월 1일) 법무부 국적과 02) 2110 - 4127

법제처				
1. 입법예고 내용 확인 및 의견 제출의 편의성 획기적 제고	① 입법예고 게재 방식 변화	○ 관보 및 각 부처 홈페이지에 게재	○ 관보 게재는 종전 유지 방식을 유지하고, 각 부처에서 필수적으로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해 입법예고를 실시 ○ 각 부처 홈페이지를 통한 입법예고는 부처에서 자율적 · 선택적으로 실시 가능	법제업무 운영규정 (’16년 4월) 법제처 법제정책총괄 담당관실 044) 200 - 6566
	② 입법예고 게재 자료의 충실화	○ 관보에는 주요 내용, 제출 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 방법 게재 ○ 각 부처 홈페이지에는 관보 게재 자료 외에 법령안 전문 및 신규조문대비표 게재	○ 관보 게재 자료는 종전과 동일 ○ 통합입법예고시스템에는 관보 게재 자료(주요 내용, 제출의견 접수기관, 의견제출 기간 · 방법)와 종전 각 부처 홈페이지 게재 자료(법령안 전문 및 신규조문대비표)를 제공하되, 추가적으로 규제영향분석서 및 입법 배경에 관한 참고 · 설명 자료 제공	법제업무 운영규정 (’16년 4월) 법제처 법제정책총괄 담당관실 044) 200 - 6566
	③ 의견제출 방식의 편리성 제고	○ 관보 공고문을 통해 의견제출 방식을 우편, 전자우편, 팩스 등으로 한정하고, 온라인 의견제출 불가능	○ 통합입법예고시스템을 통한 직접 온라인 의견제출 가능	법제업무 운영규정 (’16년 4월) 법제처 법제정책총괄 담당관실 044) 200 - 6566

국민권익위원회				
1. 공익신고 대상 확대 및 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① 공익신고 대상법률 확대	○ 180개 법률 위반사항	○ 279개 법률 위반사항으로 확대 (참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6년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044) 200-7752
	② 공익 신고자 보호 강화	○ 신고자 책임감면 (징계, 형벌) ○ 신고자 보호조치	○ 신고자 책임감면(행정처분도 포함) ○ 내부 공익신고자 특별보호조치 신설 ○ 신고자 보호조치 불이행시 이행강제금 부과 (참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6년 1월 25일) 공익보호지원과 044) 200-7772
	③ 공익신고 보상제도 변경	○ 보상금 지급 (내외부 공익신고자, 최대 10억 원)	○ 보상금 지급(내부 공익신고자, 최대 20억원) ○ 공익증진에 기여한 경우 포상금 지급(내외부 공익신고자) (참고) - 「공익신고자 보호법」 및 시행령 -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 > 알림마당 > 보도자료 > 선박안전, 아동학대, 급식 위생불량 등 이제 안심하고 신고하세요.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6년 1월 25일) 국민권익위원회 공익보호지원과 044) 200-7775

조달청			
1. 공공기관 유류 공동구매	○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현장 할인 3.99%	○ 차량용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현장할인 5.74% (참고) 나라장터 홈페이지 > 공공기관 차량용 유류 및 소규모 저장용 유류 ‘공동구매’ 서비스 안내	경제장관 회의 관계부처 합동 (’12년 2월)
			조달청 자재장비과 070) 4056-7237
2. MAS공고 및 계약기간 확대	○ 공고 2년. ○ 계약 2년	○ 공고 10년, 계약 기본 3년으로 확대 (참고) 조달청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다수공급자계약 업무처리규정 (’16년 3월)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70) 4056-7273
3. 조달업체 인증부담 완화	○ 기술항목 3분류(고도, 일반, 녹색), 10점 ○ 대상인증 19개	○ 기술항목 2분류(고도, 일반·녹색)간소화, 7점 ○ 대상인증 11개(’17.1.1 시행) (참고) 조달청 홈페이지 > 정보제공 > 법령정보 > 다수공급자계약 2 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다수공급자계약 2단계경쟁 업무처리기준 (’16년 1월)
			조달청 쇼핑몰기획과 070) 4056-7273
4. 종합심사낙찰제 시행	○ 최저가낙찰제 - 낙찰자결정방법 : 입찰가격이 낮은 자	○ 종합심사낙찰제 - 낙찰자결정방법 : 입찰가격, 공사수행능력, 사회적책임의 합산 점수가 높은 자	국가계약법 시행령 (’16년 1월 1일)
			조달청 토목환경과 070) 4056-7254

5.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신인도 가점 신설 및 확대	① 신인도 가점 신설	○ 신 설 - 「협동조합기본법」 제2조 3호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으 로 「협동조합기본법」 제85조에 의거 기획재정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조합 (0.5점)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일·학습 병행제 참여기업’으로 선 정된 업체(0.5점) - 산업표준화법 제16조의 적용을 받는 KS서비스분야의 KS서비스인증서 보유법인(0.7점) -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시간선택제 일자리 창출기업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업체(0.2점)	공익신고자 보호법, 시행령 (’16년 1월 25일)	
	② 신인도 가점 확대	○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혁신형(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중소기 업으로 지정받은 자 (0.5점)	○ 중소기업청장에 의해 혁신형 (기술혁신형, 경영혁신형, 벤처, 우수그린비즈) 중소기업으로 지정받은 자(0.5점)	조달청 일반용역 적격심사 세부기준 (’16년 1월 1일 공고분부터 시행)
		○ 「가족친화 사회환경 의 조성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 친화인증기업(0.5점)	○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따른 가족친화인증기업(1.7점)	
		○ (여성 기업) 존속기간에 따라 3년 미만 0.25점, 3년 이상~ 5년 미만 0.5점, 5년 이상 0.7점 ○ (여성 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 10% 이상이고 최근 3개월 평 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0점 (5% 및 5인 이상 0.5점)	○ (여성 기업) 존속기간에 따라 3년 미만 0.25점, 3년 이상 ~ 5년 미만 0.5점, 5년 이상 ~10년 미만 0.75점, 10년 이상 1점 ○ (여성 고용 우수기업) 최근 3개월 평균 여성고용율 10%이상이고 최근 3개월 평균 여성종업원이 10인 이상인 기업 1.25점(5% 및 5인 이상 0.75점)	조달청 신기술서비스국 기술서비스총괄과 070) 4056-6112

중소기업청

1.

소기업

기준 개편

업 종	분류기호	규모기준
1. 광업	B	
2. 제조업	C	
3. 건설업	F	
4. 운수업	H	상시 근로자 수
5. 출판·영상·정보	J	50명
6. 전문·과학·기술	M	미만
7. 사업서비스업	N	
8. 보건·사회복지	Q	
9. 농업, 임업 및 어업	A	
10. 전기·가스·수도사업	D	
11. 하수·폐기물 처리업	E	
12. 도·소매업	G	상시 근로자 수
13. 숙박·음식점업	I	10명
14. 금융·보험업	K	미만
15. 부동산·임대업	L	
16. 교육서비스업	P	
17. 예술·스포츠·여가	R	
18. 개인서비스업	S	

별표1) 참조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알림소식>
보도 자료 > 소기업 범위제도
매출액 기준으로
전면 개편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16년 1월 1일 시행)

중소기업청
정책총괄과
042) 481- 8913

2.

중소기업기술

개발제품 구매

비율(10%) 의무화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의 구매
비율 10% 이상 권장

○ 공공기관의 중소기업기술개발제품의
구매비율 10% 이상 달성을 의무화

판로지원법
시행령
(*16년 1월)

중소기업청
공공구매판로과
042) 481- 4569

3.

한·중 FTA

취약 분야

전용자금 신설

○ 별도 지원 없음

○ 한·중 FTA 취약분야 610억 원 지원

(참고) 중소기업청 홈페이지>지원정책>금융>지원정책
상세보기

'16년
중소기업청 소관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16년 1월)

중소기업청
기업금융과
042) 481- 4382

특허청

<p>1. 한-대만 우선권 증명서류 온라인 교환서비스 실시</p>	<p>○ 출원인이 상대국에 우선권 증명서류를 서면으로 직접 제출</p>	<p>○ 출원인의 우선권 증명서류 제출의무 면제 (출원서에 우선권 출원국가, 출원번호, 출원일만 기재)</p>	<p>우선권 증명서류의 전자적교환에 관한 고시 (’16년 1월)</p>
			<p>특허청 정보고객 정책과 041) 481- 5135</p>

산림청

1. 숲 속 야영장 및 레포츠 시설 허용	○ 신 설	○ 보전산지 내 숲 속 야영장 및 산림레포츠 시설의 설치 허용 * 「산림휴양법」에 따른 시설의 종류 및 기준에 적합하여야 함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정보공개> 최근개정법령> 산지관리법 및 하위법령 개정	산지관리법 시행령 (’16년 1월)
			산지관리과 042) 481- 4141
2.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 신 설	○ 산림복지전문업 등록제도 운영 (참고) 국가법령 정보센터> 법령검색>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16년 3월)
			산림청 산림휴양치유과 042) 481- 4211
3. 벌채제도 개선	○ 모두베기 최대면적 : 50ha ○ 모두베기 존치방법 : 단목, 군상, 수림대	○ 모두베기 최대면적 : 20ha ○ 모두베기 존치방법 : 군상, 수림대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행정정책> 보도자료> 보도자료> 산림청, 국민 여론 수렴해 벌채제도 개선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16년 5월)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 481- 8875

4.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범위 확대	○ 도지지역 거주자는 지자체장이 연료비 절감을 위해 필요하 다 인정하는 자	○ 화석연료 대체를 희망하는 자 * 지역제한 없음 * 보조금 부정수급자는 5년의 범위 내에서 사업 참여 제한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알림마당 > 공지사항 > 주택용 목재펠릿보일러 지원기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16년 1월)
			산림청 목재산업과 042) 481- 4201
5. 산림사업종합자금 변동금리 적용	○ 고정금리 <신설>	○ 변동금리 적용 ○ 숲속야영장, 레포츠시설 추가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통합자료실 > 2016년도 산 림사업종합자금 집행지침	2016년 산림사업 종합자금집행지침 (’16년 1월)
			042) 481- 4191, 4192
6. 임업소득사업용 국유림 대부료 경감	○ 국유림 가격에 10/1000을 곱한 금액	○ 국유림 가격에 10/100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과 최근 공시한 해당 권역의 단위면적당 임업총수입의 1/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비교하여 적은 금액 (참고) 산림청 홈페이지 > 행정·정책 > 소관법령 > 입법 및 행정예고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16년 6월)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042) 481- 4094
7. 산림보호구역 내 수목장림 설치 허용	○ 신 설	○ 산림보호구역 중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1·2종)에서 국가 및 지자체에서 조성하는 10ha 미만의 수목장림과 3ha 미만의 시설수목장림 설치 허용 (참고) 국가법령 정보센터 > 법령검색 > 산림보호법 시행령·시행 규칙	산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16년 1월)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042) 481- 4246